

세부사업	비 목	계	자비	보조금	지출내역
KIS 준비 제1차 워크샵	소 계	168,200	168,200		
	복사비	9,200	9,200		자료집 20부 발제자 1명 다과, 문구류
	강사비	100,000	100,000		
	행사진행비	7,000	7,000		
	뒷풀이비	52,000	52,000		
KIS 준비 제2차 워크샵	소 계	588,400	588,400		
	복사비	32,000	32,000		자료집 30부 오마이뉴스 생활광고 발제자 1명, 토론자 3명 참여연대 대강당 다과, 문구류
	홍보비	50,000	50,000		
	강사비	250,000	250,000		
	장소섭외비	100,000	100,000		
	행사진행비	14,400	14,400		
	뒷풀이비	60,000	60,000		
소 계	11,595,730	3,595,730	8,000,000		
KIS 행사	초청경비	7,291,760	1,595,730	5,696,030	· 6개국 재외동포 비행기값 · 발제자 7명 체재지원비 · 초청장 발송 및 공항마중 · 자료집 200부 · 성공회대 새천년관 3일간 · 행사진행 중 식비 · 음료· 다과, 문구류 · 사물놀이 공연 섭외비 · 포어/노어/영어/일어 번역 · 플랭카드, 리플렛, 포스터, 오마이뉴스 생활광고 등 · 남산타워관광, 뒷풀이 등
		350,000		350,000	
		52,000		52,000	
	인쇄비	1,000,000	1,000,000		
	장소대여비	1,000,000	1,000,000		
	행사진행비	435,700		435,700	
		29,020		29,020	
		50,000		50,000	
	번역비	600,000		600,000	
	홍보비	472,250		472,250	
	행사뒷풀이비	315,000		315,000	
비디오 제작 및 백서 발간	소 계	3,000,000	3,000,000		
	비디오 촬영 편집·복사	1,000,000	1,000,000		비디오 촬영·편집비 테이프 복사 10개 KIS 활동백서 300부
	인쇄비	2,000,000	2,000,000		

별도 제출 자료 목록

□ 영수증철

- 시민운동지원기금의 지원금 8백만원에 해당하는 영수증 원본

□ KIS 자료집 5부

□ KIS 활동백서 5부

- KIS 선언문
- 3차례 공개세미나
- 2차례 워크샵 자료집
- 사업추진 내용을 담은 사진
- 언론보도 자료 및 기사 스크랩
- 활동 평가서

□ 포스터 및 리플렛 5부

□ 비디오 테잎 1개

<제2부>

KIS 추진과정 자료집 모음

- KIS 추진위원회 발족식
- 「재외동포 이주사 및 정책, 상반기 공개세미나」 1
- 「재외동포 이주사 및 정책, 상반기 공개세미나」 2
- 「재외동포 이주사 및 정책, 상반기 공개세미나」 3
- 재외동포법 개정을 둘러싼 ... 쟁점사항 정리보고
- KIS 준비를 위한 제1차 워크숍
 - 재외동포재단 현황 및 사업소개
- KIS 준비를 위한 제2차 워크숍
 - 한국사회 소수민족 기본법 도입의 필요성

KIS 추진위원회 발족식

■ 식 순 ■

1. KIS 추진위원회 발족까지의 경과 보고 (3분) - 범용
2. KIS 기획안²⁾ 및 의제연구팀 활동계획 발제 (10분) - 범용
3. KIS 추진시 문제점 지적 및 자문위원들의 조언 (20분)
4. 자문위원 대상자 명단 확정 (15분) - 준희
5. 해외넷웍팀 활동계획 발제 및 재외동포 초청대상자 확정 (15분) - 덕호
6. 참가자 자유발언 (12분)

<참고자료> 행사실무팀 활동계획

■ 일 시 : 2002년 3월 23일(토요일) 늦은 4시

■ 장 소 : KIN 사무실

대표 양영미 서울시 종로구 당주동 171번지 삼록빌딩 503호
T. (02)735-4327 F. (02)735-4328 e-mail kin@kin.or.kr 웹 www.kin.or.kr

2) 'KIS 기획안'은 애초 「발족식 자료집」에 '안건 2-1'로 포함되어 있었으나, 여기서는 『활동백서』 <제1부>의 'KIS 행사기획안'과 동일하여 생략함

안건 1.

KIS 추진위원회 발족까지의 경과 보고

<2001년>

- 10월 5일 「해외 소수민족 및 이주 정책에 관한 Korean International Symposium」 이른바 KIS 프로젝트 시민운동지원기금에 신청
- 12월 초 시민운동지원기금 신청사업 선정
- 2월 6일 KIS 실행계획서(계획변경서) 시민운동지원기금에 제출 시민운동지원기금과 KIS 계약체결

<2002년>

- 2월 9일 KIS 제1차 준비위원회
- 2월 20일 KIS 제1차 지원금 320만원 수령
- 3월 2일 KIS 제2차 준비위원회
- 3월 16일 KIS 제3차 준비위원회
- 3월 23일 KIS 추진위원회 발족식

안건 2-2.

의제연구팀 활동계획

□ 활동방향

- 「KIS 4대 의제」에 대한 연구기획
- 「KIS 4대 의제」에 관한 학습 및 논점 잡기
- 자문위원단 네트워킹
- 워크샵 및 KIS 행사 마당에 대한 기획

□ 운영방향

- (9월경까지) 격주 토요일 KIS 추진위 정기회의를 행사실무보다 의제연구 중심으로 진행
- 세부주제에 따른 국가별 전문가를 초청해 발제를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전문가 발제 전 관련 자료를 조사하고 읽어 논점을 잡은 후 질문목록을 작성함
- 전문가 1인당 발제는 30분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녹취한 후 기록해 자료로 남김
- 전문가의 초청 및 발제를 통해 자문위원단 네트워킹을 확대함
- (10월경부터) 2차례의 워크샵 이후 정기회의는 KIS 행사 준비를 위주로 진행

□ 연구방향

- 6월 22일(토) 제1차 워크샵 때까지
 - 국외 6개국(아래 각국) 재외동포들의 이주역사와 현황 정리
 - 각국 소수민족 혹은 장기체류 외국인 정책 검토
 - > 제1차 워크샵 주제
 - 각국 재외동포들의 이주역사와 현황 개괄
 - 소수민족 기본법 도입 등 국내 소수민족 시각에 선 발상법을 위하여
- 9월 28일(토) 제2차 워크샵 때까지
 - 각국 재외동포 혹은 재외국민 정책 검토
 - > 제2차 워크샵 주제
 - 각국 재외동포 혹은 재외국민 정책 개괄
 - 한국 재외동포 정책 비판적 고찰
- 11월 23~25일 KIS 행사 때까지
 - 재외동포 사회의 과제 및 한국 재외동포 정책의 과제 선정
 - KIS 행사가 남긴 향후 과제 및 약속 공동선언

- 논의의 번짐을 막기 위해
이주노동자 및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비교연구는 이후의 과제로 남김
- 이것이 이주노동자 및 단기체류 외국인 정책에 대한 언급 자체를 막는 의미는 아님
- 의제연구시 2개국 전문가를 초청·발제하게 함으로써 비교연구가 가능하도록 함
- 워크샵은 주제발제를 선정하고 그에 대해 토론을 벌이는 식으로 진행함

□ 재정

- 세부주제별 초청강연은 사전에 양해를 구해 무료강연을 유도하되
부득이한 경우 강연료를 최소화해 지급함 --> 강연료는 정책교육실에서 지출함
- 세부주제별 발제문 복사비는 참가자들에게 각출함
- KIS 추진위 정기회의시 다과는 정책교육실에서 지출함
- 수입은 후원, 참가비, KIN 지원 등으로 하고
연구활동에 따른 재정지출을 최소화함으로써 별도의 수익사업은 일단 고려치 않음

□ 세부주제 및 연구일정

- 전반부 연구 : 각국 재외동포 이주역사 및 현황과 소수민족 정책
 - 5월 11일 - 러시아와 중국
 - 5월 25일 - 독일과 일본
 - 6월 8일 - 남미와 미국
- 후반부 연구 : 각국 재외동포(재외국민) 정책
 - 8월 3일 - 러시아와 중국
 - 8월 24일 - 독일과 일본
 - 9월 7일 - 남미와 미국
- KIS 행사를 위한 연구
 - 10월 5일 - 재외동포 이주역사와 현황 발표 준비 1
 - 10월 19일 - 재외동포 이주역사와 현황 발표 준비 2
 - 11월 2일 - 한국 재외동포 정책 과제 선정
 - 11월 16일 - 공동선언문 초안 검토
- 11월 23일 <KIS 행사> 공동선언문 발표

안건 3.

관련지역 및 주제 자문위원 후보명단

◇이준식
정신문화연구원 연구원. 해외이주사
관심.
재일조선인, 고려인, 조선족 재외동포
관심
자문가능. 워크샵 초청도 가능

◇김인덕
국가보훈처 연구원. 재일조선인 연구
가.

◇장태한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교수.
현재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심.
미국 교포인권 문제 자문가능

◇이철
외대 러시아과 교수.
고려인 이주사 관련논문.

◇권희영
정신문화연구원 교수. 근대사 연구가
해외이주사 및 재외동포 전반적인 관
심.

◇정혜경
재일조선인 강제노동관련 연구가.
국가기록원 연구원.

◇조정남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러시아, 일본 및 민족문제에 관심.
중국재외동포정책관련논문

◇조화성
민족문제연구원. 독
일의 재외동포정책관련 논문

◇고병국
민족문제연구원.
일본의 재외동포정책관련 논문

◇이체문
경북대 사회학과 교수. 재러한인관련
논문

◇엄빅토르
타슈켄트 대학총장. 재소한인사 관련
논문

◇김용찬
민족문제연구원
남북한 재외동포정책관련논문

◇윤인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이민 및 마이너리티 문제 관련

◇최종술
서울대학교 노어노문학과 강사

◇이진영
경희대학교 교수

◇김형주
MIZY 센터 소장

◇노영돈
인천대학교 법학과 교수

안건 4.

해외넷워킹팀 활동계획

□ 활동내용

- KIS 6개국 초청대상자 확정 및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 유지
- KIS 의제에 대한 사전 홍보, 연구 의뢰 및 단계적 점검
- 시기별 KIS 한국준비 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홍보 및 피드백
- KIS 종료 후 KIN의 해외 자문위원으로 조직화

□ 6개국 조직화 현 상황 및 계획

- 현재는 미국(김대영 교수), 일본(곽진웅 국장), 러시아(리 나탈리아 선생님) 등 3개국 초청대상자와 구체적으로 논의중임
- 독일과 남미는 양영미 자문위원이 추진하고 있으나, 남미는 불확실한 상황
- 중국의 초청대상자는 중국쪽 자문위원인 임진철 교수의 자문을 얻을 예정임
- 각 국의 초청대상에 대한 자문은,
미국(직접), 독일(양영미 자문위원),
일본(강혜정 자문위원), 러시아(최종술 서울대 강사),
중국(이종훈 자문위원 혹은 임진철 자문위원),
남미(양영미 자문위원 혹은 재외동포재단 서성철씨 혹은 미국의 김대영 교수)

□ 운영방향

- KIS 추진위 정기회의를 통해 조율해 나가고 자체팀 회의는 고려치 않고 있음
- 해외넷워킹팀은 새로운 구성원 혹은 자원활동가를 충원할 계획은 없으나,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함께 할 예정임

□ 상반기 일정

- ~ 3월 하순, 6개국 초청 예상자 선정, 초청예상자 유선 연락 확인
- ~ 4월 하순, 6개국 초청대상자 선정 완료, KIN 공식문서 발송
- ~ 5월 중순, 6개국 초청자를 대상으로 KIS 의제 구체 홍보 및 의제연구 의뢰 완료
- ~ 6월 하순, 한국 준비상황 구체홍보 및 추진상황 1차 점검

□ 재정

- 국제 전화 및 팩스, 우편물 발송료 등 실비, 월별 5만원 지출 예상함
- 정책교육실 자체 재정으로 처리할 예정

<참고자료>

행사실무팀 활동계획

□ 활동방향

- 객원연구원 모집과 이들과 함께 하는 자원활동 모색
- 장소섭외, 행사장 미화, 필요장비 임대, 통역도우미 모집 등 KIS 행사를 위한 실무지원
- 다양한 홍보전략 수립과 이의 집행을 통해 KIS 행사를 적극적으로 알림
- 효과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KIS 행사의 안정성을 도모

□ 객원연구원 모집 공고

- KIN 홈페이지에 팝업창으로 그리고 재외동포 관련 홈페이지 모집 광고 게시
- 서울대 '우리세대' 및 아리랑 등 재외동포 관련 잡지 광고 게재 요청
- 외국어과 대학생 및 대학원생 모집 공고
(독어과, 러시아어과, 스페인어과, 영어과, 일어과, 중국어과)
- 각 대학 한국어학당에서 수강하는 재외동포들
- 역사과 대학생 및 대학원생 모집 공고 (국사학과, 동양사학과, 서양사학과)
- 관심있고 활동가능한 KIN 회원 참여 적극 유도

□ 운영방향

- 4월 말까지 객원연구원을 모집해 9월 말까지 의제연구 중심으로 협동력을 높여나감
- 객원연구원에게 자원활동의 의사를 타진하고 적당한 시기 행사실무팀 회의를 시작함
· 그전까지 행사실무와 관련된 일은 담당자 개인적으로 점검해 나감
- 9월경 별도의 자원활동가 및 통역도우미 모집이 필요할 시 2차 모집공고를 함
- 자원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자원활동가 개인부담을 원칙으로 함
- 최소 2차례의 단합대회를 통해 인적인 유대감을 형성함
- 가능한 활동을 세분화하고 명확히 해, 자원활동의 참여 폭을 넓힘

□ 제1차 워크샵 때까지 일정

- ~ 3월 30일 - 객원연구원 모집공고 문안 검토 완료
- ~ 4월 15일 - 객원연구원 모집 공고(광고) 완료 (2주간 객원연구원 모집)
- 5월 4일 - 객원연구원 전체모임
- ※ 5월 11일부터 KIS 추진위 정기회의에 참석해 의제연구 시작

해외 소수민족 및 이주 정책에 관한
Korean International Symposium 추진위원회

「재외동포 이주사 및 정책, 상반기 공개세미나」 1

-- 재외동포 이주사 및 각국 소수민족 정책을 중심으로 --

- 5월 25일(토) 오후4시, KIN 사무실
 - ◇ 미 국 - 조혜영(한국청소년개발원 책임연구원)
 - ◇ 브라질 - 최금좌(외국어대 포르투갈어과 강사)

- 6월 1일(토) 오후4시, KIN 사무실
 - ◇ 독 일 - 양영미(참여연대 국제연대 간사)
 - ◇ 중 국 - 이진영(경희대 교수)

- 6월 8일(토) 오후4시, KIN 사무실
 - ◇ 일 본 - 이준식(정신문화연구원 연구원)
 - ◇ C I S - 노영돈(인천대 교수)

때 : 2002년 5월 25일 토요일 오후 4시

곳 : KIN 사무실

KIN(지구촌동포청년연대)

초고: 재미한인 이주사 및 현황

조혜영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원)

1. 노동이민

최초의 미국 이민은 1902년 '하와이 사탕수수 재배자 협회'의 찰스 비숍 회장이 내한해 한국인 노동자를 모집하면서 이해 12월 97명이 이주한 것을 효시로, 1905년까지 총 7300여명이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 노동자로 이주하였다. 이들은 1905년경부터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서 임금이 높은 캘리포니아 서부의 오렌지 농장, 철도, 광산지대로 이동하기 시작하였다. 1905년부터 1907년 사이 모두 1,003명이 캘리포니아 등 본토로 이주해감으로써 한인 사회는 호놀룰루에서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로 점차 발전해 나갔다.

초기 개척자들은 낮이면 사탕수수밭에서 노동을 했고 밤이면 농막에 들어가 밤을 지냈다. 너무 심한 중노동과 정신적 고통 등으로 병이 나는 사람들도 있었다. 매일 10시간씩 농장일을 했고 하루 임금은 69센트를 받았다. 한숨과 눈물에 젖은 노동생활이 계속되었는데 이들 개척자들은 미주 한인 사회건설과 조국 광복운동의 주춧돌이 되었다. 이들에게 미국 정부는 사진을 교환하게 하여 한국의 신부감을 맞아들이게 하였다. 그 당시 미주의 신랑들은 고국의 신부가 마음에 들면 여행 경비로 2백달러를 보내주었다고 한다. 사진결혼은 1924년 5월 15일 '동양인 배척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14년간(1910~1924년) 계속되었다고 한다. 그 사이 영남 출신의 신부 951명이 하와이로 들어왔고, 상해를 거쳐 북한출신 신부 105명이 미국 본토로 건너갔다. 이들 사진신부들은 비교적 교육 수준이 높았지만, 남편과의 나이 차이 등 현지 생활에 적응을 하는데 어려움도 많이 겪었다. 그러나 자녀교육에 남다른 열의를 보였다(<http://exoh.com/utkr/utah/usa/eminsa.htm>).

하와이의 노동이민이 중단된 원인은 두 가지로 설명된다. 첫째는 새로운 경쟁자가 하와이에 나타나는 것을 먼저 온 일본인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한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조국을 움직여서 조선으로부터의 이민 금지령을 내리게 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이유로는 부족했던 일본인 노동자를 러일전쟁이 끝나자 다시 일본으로부터 얼마든지 모집해 올 수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http://exoh.com/utkr/utah/usa/eminsa.htm>).

2. 초기 유학생

한편, 초기 미주 유학생들은 도착시기에 따라 3차로 구분을 할 수가 있다.

1차는 1882년 한미조약부터 1902년까지 망명 혹은 유학을 목적으로 온 이들이다. 이때 도착한 학생들로는 박영효, 백상규, 이대위 등이 있고 이민시대(1903~1905년)에 이강, 신성구, 신흥우, 백일규, 임두화, 이원익, 정한경, 강영승, 강영대, 차의석, 송헌주, 임정구, 양주삼 등 40여명이 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이 부인과 함께 교육학을 전공하기 위해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때도 1902년 10월경이다. 당시 시내에서 인삼을 파는 한인 2명이 서로 떡살을 쥐고 싸우고 있어 도산 선생이 말렸다는 일화가 있어 한인 상인들이 일찍이 샌프란시스코에 진출했던 흔적을 엿볼 수가 있다. 도산 선생은 샌프란시스코에서 1903년 9월 23일 한인 최초로 '한인친목회'를 조직했으며 1913년에는 흥사단을 만들어 민족을 계몽했다(<http://www.dongponews.com>).

2차 도미는 1910년 한일합방 이후로 1918년까지 8년 동안 망명으로 출국을 했는데 이들은 여행권없이 신도(新渡)학생이라는 이름으로 도착했다. 그 숫자는 541명이나 된다. 신도학생들은 대개 일본배척사상이 강했던 청년 혹은 장년들인데 혼란한 정국을 피해서 중국 상해나 유럽을 거쳐서 미국으로 갔는데, 그 수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재미 한인사회 건설과 조국 광복운동 후원에 앞장섰다. 그들은 먼저 온 동포들과 사상이 같았고 정치적 운동과 단체 발전에 헌신했다. 그리고 1930년대 이후에는 미주 초기이민 사회의 중추세력이 되었다.

3차로는 1921년부터 1940년까지 일본 총독부 여행권을 가지고 도미한 학생들인데 그 수는 298명이다. 이들은 공부를 하고 귀국한 사람, 제2차 세계대전 때 통역을 한 사람, 그리고 미국에 영주한 사람도 있다(<http://exoh.com/utkr/utah/usa/eminsa.htm>).

3. 미군과 결혼한 여성

1924년 이후부터는 미국 정부가 국가별, 인종별 이민 할당제를 시행함에 따라 한인의 미국 이민은 사실상 중단되었다. 해방 후에는 한국 전쟁의 여파로 미국인과 국제 결혼한 여성 및 입양고아, 소수 유학생이 주류를 이루어 도미하면서, 1965년까지 1500여 명이 미국 본토로 이주하였다. 이들은 후일 한국인 가족 초청이민을 주도한다.

1950년에서 1972년 사이에 28000여명의 한국 여성이 미군과 결혼하여 도미하였다.¹⁾ 이들은 1945년과 1965년 사이의 이민자 집단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다. 1980년까지 이들 여성의 숫자는 5만여명에 이르렀다. 1964년에는 이민자들 중 82%가 여성이었다. 이들 여성의 평균 학력은 7.2년으로 보통 한국이민자들의 평균 교육연도인 12.7년에 훨씬 못미치는 것이다.²⁾

1) Kim, I. 1987. Korea and East Asia: Pre-migration factors and U.S. immigration policy. In T. Fawcett and B. V. Carino (Eds.) *Pacific Bridges: The New Immigration from Asia and the Pacific Islands*. Staten Island, NY: Center for Migration Studies, 327-345.
2) Kim, H-C. 1986. Koreans in the United States. *Dictionary of Asian American History*. NY: Greenwood Press. 13-22.

4. 1965년 이후-- 본격화된 이민

1965년 10월 미국이 이민법 상의 국가, 인종별 할당제를 폐지함에 따라 미국이민이 급속히 증가하여 1970년대에는 26만 8천명, 1980년대에는 33만 4000명이 이주하였으며, 이 시기에는 합법이민 외에도 재산도피, 위장 이민 등 비합법적인 이민도 증가하였다.³⁾

1965년 이민법은 1924년에 제정한 국가별 이민 쿼터를 폐지했고 270,000여명의 새로운 이민을 허용한다. 이 법은 또한 미국 시민이 된 사람들의 가족, 배우자, 부모 등을 쿼터 외에 추가로 이민을 허용한다.

한국적 상황도 미국의 이민법과 관련이 되어진다. 1962년에 남한 정부는 인구억제, 실업 문제 해결, 외화획득을 위해 국민의 해외송출을 장려한다. 이때 외화획득을 위해 의사와 간호사들을 해외로 파견한다. 또 노동 송출을 기획하여 1963년에서 1974년 사이에 17000여명의 간호사와 광부를 서독으로 파견한다. 이들 중 대부분은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대신에 미국으로 이민을 간다. 이러한 정책과 함께 한국 사람들의 현대성의 추구 및 지위 상승욕도 미국행을 선택하게 하는 주요인이 된다. 1960년대 이후 한국의 경제 발전, 도시화, 교육 확대로 이들의 신분 상승에 대한 기대는 급증하는데 비해 한국의 현실은 그에 상응하지 못하였다. 또한 대졸 출신들이 자신의 학력에 맞는 직업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1965년부터 1980년 사이 4년제 대졸 출신 남자들의 경우 실업률이 28%에 달하였다.⁴⁾

1965년 이후의 미국 이민자들의 대부분이 고학력이고 부유한 사람들이라고 알려진 반면에 미군과 결혼한 여성들의 일가 친척들도 이시기에 많이 이민을 떠났다. 또한 1976년에 제정된 이민규정은 외국에서 취득한 의사면허는 허가하지 않는 것으로 바뀌어 한국이민자들의 학력 배경은 점차 낮아지게 된다. 1976년의 규정은 Ford 대통령이 전문직 이민을 세 번째 선호도에서 여섯 번째로 격하시킨 것이다. 이것은 미국이 전문직이민에 대한 문호를 닫은 것이나 다름없다. 미국은 1970년대 중동 오일 쇼크 이후 불경기가 계속되자 자국내 노동자들의 직업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외국 전문직 노동자들의 미국 이민을 억제하기 시작하였다.⁵⁾ 또한 이 법은 남한이 1975년에 제정한 이민법이 외화 유출과 두뇌 유출을 두려워하여 중상층 이상의 이민을 제한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

1965년 이후의 한국 이민은 두가지 다른 집단으로 구분 될 수 있는데 하나는 1965년 이민법으로 이민간 사람들과 1976년 이민법 개정으로 이민간 사람들이다. 1976년 이전에는 비교적 고학력 전문직 종사자들이고 1976년 이후에 학력이나 배경에 있어 지극히 다양함을 보인다.

1970년대에는 이미 미국에 정착한 교포들이 그들의 가난한 친척들을 불러들이는 식의 "chain migration"이 주종을 이루었다. 이러한 식의 이민은 이미 형성된 한인 타운을 중심으로 직업이나 정보를 얻게 하는 이점이 있다.⁶⁾

3) 국가안전기획부, 『21세기 국가 발전과 해외한민족의 역할: 체계적 교류, 협력망 구축 방향을 중심으로』 (국가안전기획부, 1998).

4) 윤인진, 2000, 미국으로의 한인 이주와 이민가족의 세대갈등, 재외한인연구, 제9호, pp.5-44.

5) 윤인진, 2000. 위의 글.

한국의 미국으로의 이민은 1980년대에 이르러 감소하는 경향이다. 1970년대와 80년대에는 연간 3-4만 명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다가 1988년을 정점으로 해서 2만명 미만으로 감소한다. 이러한 경향은 미국 이민 정책의 변화, 한국인들의 미국에 대한 인식 변화, 한국내에서의 새로운 지위상승 구조의 형성 등의 영향이다.⁷⁾ 하지만 90년대 후반의 IMF 영향으로 이민에 대한 관심은 증가하게 된다. 1997년에는 12,484명이 이주목적으로 해외로 떠났지만 1998년에는 13,974명으로 증가하였고, 1999년에는 12,655명으로 약간 감소하였다가, 2000년에는 15,307명으로 다시 증가하였다. 또한 미국으로의 이민이 제한되고 이민 수속이 장기화되자 캐나다와 멕시코를 경유하여 미국으로 밀입국하거나 단기방문비자를 가지고 입국한 뒤 장기 체류하는 등의 불법 체류자가 증가하였다.⁸⁾

5. 현황 총괄

미국 이민국에 의하면 1941년부터 1998년까지 57년 동안 총 778,899명의 한인이 이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9년 외교통상부 통계에 따르면 재미동포의 수는 총 2,061,577명이고 이 중에서 시민권자는 602,921명(29%), 영주권자는 1,119,573명(54%), 기타(불법체류자포함)는 198,862명(9%)으로 밝혀졌다. 2001년 외교통상부 발행 자료에 따르면 재미동포는 212만여 명(2,123,167)으로 증가하였다.⁹⁾ 주로 LA에 678,000명, 뉴욕에 519,270명, 시카고에 204,592명, 샌프란시스코에 162,411명, 시애틀에 142,203명 등 대도시 지역에 많은 한인이 거주하고 있다.¹⁰⁾

재미 한인 사회의 경우 이민이 본격화된 지 30여 년이 지나면서 식품점, 봉제 공장, 세탁소 등의 소규모 자영업을 하던 1세 중심에서, 1.5세와 2세로 점차 주도권이 넘어가는 시점에 놓여있다. 이들 젊은 세대들은 1세대에 비해 언어와 교육면에서 이민 사회에의 적응에 유리한 입장에 있으며, 이민 1세와의 관계를 통하여 민족의 전통 문화에도 어느 정도 익숙하다. 따라서 이들은 미국 주류 사회의 진출과 더불어 모국과의 가교 역할에도 큰 기대를 받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들 1.5세나 2세들이 학교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며, 미국 주류 사회에 대해서 주변인으로서의 소외감을 느끼기도 하고, 인종 차별 및 자아 정체성 문제 등으로 인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¹¹⁾

6) Yoon, I-J. 1997. On My Own: Korean Business and Race Relations in America.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7) Abelmann, N and Lie, J. 1995. Blue Dreams: Korean Americans and the Los Angeles Riot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8) 윤인진, 2000. 위의 글.

9) 미국에 212만여 명(2,123,167), 중국에 188만여 명(1,887,558), 일본에 64만여 명(640,234), 독립국가연합에 52만여 명(521,694) 등으로 이들 주요 국가 외에도 동남아시아, 중남미, 유럽, 아프리카 등지에 걸쳐 565만여 명에 이르고 있다(외교통상부, 2001).

10) 외교통상부. 2001. 『재외동포현황』. 서울: 외교통상부.

11) 윤인진, 「재미한인의 민족정체성에 대한 고찰」 『교포정책자료』, 제56집(1997), 129-171쪽.

박동준, 「한민족공동체(KC)를 위한 교육방안」 『한민족공영체』, 8호(2000), 13-51쪽.

Jo, Hye-young, "Locating Korean Language and Identity Among Second Generation

한인들은 자영업 종사자가 다수를 차지한다. 1990년 미국 센서스에 따르면 25%가 자영업에 종사한다고 나타났는데 이것은 미국일반인의 자영업 참여율인 10%에 비해서 2.5배 높은 것이다. 특히 한인들이 집중적으로 살고 있는 대도시 지역에서는 자영업 참여율이 30-50% 정도에 이른다.¹²⁾ 자영업의 종류로는 세탁, 과일, 식품, 주류, 의류, 잡화, 식당 등에 종사한다. 자영업은 미국 사회에서 경제적 안정을 추구하는 한인들이 다른 경제적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택하고 있는 현실적인 수단이다. 한인의 자영업은 대부분 일가 친척이나 가족 구성원들을 동원하여 장시간의 노동력을 투여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로스앤젤레스에서 실시된 연구에 따르면 한인 상인들 가운데 40%가량은 연 순수입이 40,000달러정도라고 한다. 이는 미국 중류층의 연 수입이 40,000달러에서 100,000달러 사이이기 때문에 적지 않은 한인 상인들이 중류층에 못 미치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고 한다.¹³⁾

또한 한인 자영업자들의 대부분이 유태인이나 이탈리아계가 장사를 하던 흑인 지역에 들어가 상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흑인들이 자신들의 지역에서 돈을 벌면서 이 지역 커뮤니티에 기여하지는 않고 있다는 불만을 품게 되고 한흑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흑인들은 한인이나 기타 최근의 이민자들에 비해 자신들은 미국의 시민이라는 의식이 강하며 이민자들에게 경제적 기회를 부여하기보다는 더 오랫동안 미국 사회에서 뿌리내려온 자신들에게 기회를 부여할 것을 요구하고 최근의 이민자들인 아시아계들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표시하기도 한다. 또한 자신들은 미국의 60년대 후반부터 있어온 시민권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백인과 동등한 참정권을 얻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싸워왔는데 이러한 노력의 과정도 없이 후발 이민자들이 마치 무임승차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대한 반감이 있다. 또한 한인 자영업자들의 대부분이 영세하여 가족단위의 무임노동력을 사용하고 밤늦은 시간까지 영업을 하기 때문에 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가 많으며 이에 대한 불안 심리 및 방어 기제로 흑인 고객에 대한 감시를 하는 과정에서 흑인들에게 충격을 가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더욱이 한흑갈등이 두드러져 보이는 것은 흑인 정치운동가들이 선동하여 한인 상가 불매운동 등을 이끌면서 나타나는 결과이다.¹⁴⁾

미 연방통계국에 따르면 재미동포들의 연평균 수입이 미국에 살고 있는 전체 동양계의 평균 수입보다 11%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미 연방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90년 기준 18세부터 64세까지 재미 한인들의 연평균 수입은 2만79달러로 전체 동양계 연평균 수입 2만2,579달러보다 11.07%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일본계가 연평균 2만8,257달러로 동양계 가운데 가장 많고, 인도계 2만7,815달러, 중국계 2만2,579달러, 필리핀계 2만1,416 달러의 순이며, 한인이 그 뒤를 잇고 있다. 한국계 남자의 연평균 수입은 2만5,527달러, 여자는 1만5,048달러로 각각 집계됐다(<http://www.hk.co.kr/event/hanet/gse22.htm>).

Korean Americans,"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Vol. 3, No. 2, 2000, pp. 105-137.

12) 윤인진, 2000. 위의 글

13) 윤인진, 1996. 다인종 사회에서의 소수민족관계 : 미국에서의 한흑 갈등을 중심으로 www.hanminjok.net.

14) 윤인진, 1996. 다인종 사회에서의 소수민족관계 : 미국에서의 한흑 갈등을 중심으로 www.hanminjok.net.

6. 세대별 특성 및 갈등요소

재미한인의 경우 1세대는 언어나 문화 장벽 때문에 주류 사회로 진출하지 못하고 자영업 등을 하며 소수민족 지역이나 한인 지역에서 자리잡고 살아가던 반면에 이제 2세대는 미국 사회에서 교육을 받고 주류 사회로 진출할 기회와 가능성이 많아졌다. 그에 따라 2세 변호사나 의사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경향이다. 하지만 일정정도 수준을 넘어서 사회적 지위상승에 대해서는 인종 편견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한인 2세대들은 그러한 편견으로부터 비교적 제한이 적은 직종인 의사나 변호사, 공대나 경영 계통의 전공들을 택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특히 인문 사회 계열의 전공은 인기가 없다.

한 2세 학생은 대부분의 한인 부모들이 택하기를 원하는 전공에 대해서 언급했다. premed, 공학, 법학, business가 한인 부모들이 선호하는 4가지 전공이라는 것이다. 인문학같이 돈을 버는데 불리한 전공은 싫어한다고 했다. Suzuki(1986)도 아시아계 미국인들 중에 기술, 과학과 관련된 분야, 공학, accounting, computer science 등에 학생들이 몰려 있고 인문학과 사회과학은 잘 선택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¹⁵⁾ 한 재미 한인 2세 학생은 미국 사회의 성공 기회에 대해서 그렇게 낙관적인 관점을 취하지 않는다. 그녀는 미국 사회에서 마이너리티의 지위에 대해서 인지하고 그들이 어떤 식으로 차별대우를 당하는지에 대해서 언급한다. 즉, 아시아계 미국인들에게 있어서 성공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될 수는 없지만 지위상승 기회에 있어서 최상위층을 차지하기는 힘들다고 말한다. 즉, 최 상위층에는 백인 위주의 연망이 작용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대학시절 fraternity 등을 통해서 알고 있던 동료들을 자신의 부서에 채용한다는 것이다. 즉, 최상위층에는 이와 같은 형제애가 항상 작용한다고 말한다. 미국에서 발행되고 있는 한국어 잡지 Korean Journal에는 미국의 통합을 가로막는 큰 장애 요인으로 인종 문제를 들고 있으며 이는 여전히 사회전반에 백인 우월주의가 내포되어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국은 반인종차별법 등 수많은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 인종차별을 막으려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그리고 심지어는 교육분야에도 존재한다. 법을 지켜야하는 검찰과 경찰 그리고 FBI 등 사법기관에서조차 인종차별 논쟁이 일고 있다. 더 나아가 심지어 미국의 정의와 평등의 보루인 연방 대법원에서도 소수계 직원들이 인종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실정이다. 또 대통령을 경호하는 시크릿서비스의 흑인직원들도 인종차별받았다고 소송하고, 학원가도 어퍼머티브액션 프로그램을 놓고 대결구도가 벌어지고 있다.

인종차별은 국가를 지키는 군대에도 있다. 미국 군대내의 흑백비율은 백인이 67.2% 그리고 흑인이 19.9%다. 그러나 사병의 비율에 있어서는 백인이 64.1% 그리고 흑인이 22.2%다. 그리고 미군 전체 장교 가운데 백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83.8%, 흑인은 8.1%고 하사관은 흑인이 22.2%, 백인이 64.1%다. 흑인은 계급이 낮은 곳에 넓게 포진하고 있고 고급 장성 중에서 흑인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또 미 육해공 그리고 해병대 진급위원회에서 군대 내 중추계급인 대령 진급심사시 대령진급자격자로 올려지는 비율은 흑인들은 전체 대령진급예정자 가

15) Suzuki, B. H. 1986. "Asian Americans and American Education." Dictionary of Asian American History. Edited by Hyung-Chan Kim. Greenwood Press. pp. 77-85.

운데 19%, 백인들은 전체 대령진급예정자 가운데 39%다.

대학도 마찬가지다. 지난 90년대 중반 이후 아이비리그 중의 하나인 컬럼비아대를 비롯해 메사추세츠 공과대학, 예모리대, 켄트주립대 등에서 특정 인종을 비방하고 공포감을 조성하는 인종범죄 사건이 연속으로 발생하고 있다.

인종차별은 아시아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 클린턴 행정부시절 미 사법부는 불법 선거자금을 추적하면서 민주당의 주요 지지세력인 아시안들을 간첩으로 몰았으며 또한 로스 알라모 국립연구소에서 일하던 중국계 이학박사 이원호에게 또한 간첩혐의를 둘러 씌우기도 했다. 결국 두건 모두가 결정적인 범죄 없음으로 종결지어졌지만 아시안들의 미 정치분야 기부는 크게 줄었고 주요 연구소 등에서 일하는 아시안 두뇌들은 여기저기 눈치를 봐야하는 신세가 됐다. 이같은 인종차별은 미국인들의 일체감을 조성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 (<http://www.kjol.com/ed01-28.htm>)

재미한인 가족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특성으로는 세대간의 갈등 양상을 들 수 있다. 이민 1세대인 부모세대는 고국으로부터 가져온 문화요소들 중에 보다 보수적이고 자녀들을 안전한 직업으로 이끌 수 있도록 하는 유교적인 가치들을 강화하는 반면에 미국에서 성장해온 자녀세대들은 이러한 부모의 가치관을 이해하기 힘들어한다. 더욱이 부모들은 자신들이 자녀교육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며 고생을 하고 있다고 강조함으로써 자녀들은 크나큰 부담을 느끼게 된다. 일반적으로 재미한인 부모들은 교육에 높은 가치를 두며 아이들의 학업 성취를 강조한다. 이들은 아시아권 문화 요소 중에 웃어른에 대한 공경, 부모에의 순종, 자녀에 대한 지원, 학문 숭상 등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러한 강조는 자녀 세대들이 부모에 대해서 기대치 못한 반응양식을 보일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고려하지 못한다.

예컨대, 재미한인 청소년들이 부모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보이는 반응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자녀세대는 부모 세대와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캘리포니아 지역에 거주하는 207명의 중, 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조사에 따르면, “내가 하기 싫어하는 것을 강요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73%)” “부모가 좀 덜 엄했으면 좋겠다 (65%)”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해 부모가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81%)” “부모님이 나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싫다(78%)” 등의 반응을 보여 부모와 자녀세대간의 단절의 일면이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부모의 기대와 자녀의 경험 사이에 단절이 존재하는 것이다. 또한 56%의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대해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고 조사대상 3분의 1 가량이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¹⁶⁾

또한, 아시아계나 한인 2세의 경험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 상황이나 맥락의 변화에 따라 부모세대가 특별히 강조하는 문화적 가치나 전통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즉, 특정한 가치가 새롭게 강조되기도 하고 일부는 억압되기도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교육에 대한 강조 및 호스트 사회에 대한 온순한 태도는 적대적인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Okutsu(1989)는 아시아계 대학생들에 대한 연구를

16) Park, Eun-Ja Kim. 1995. "Voices of Korean-American Students." *Adolescence*, 30(120): 945-953.

통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아시아계 학생들은 인종주의적인 사회에서 조용하고 비둘출적인 태도를 배우게 된다. 사실, 이러한 행위는 지배 사회에 의해 강화되어진 것이다”(p. 234). 즉, 아시아계 미국인의 교육에 대한 집착은 우선적으로 적대적인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더욱 강화된다고 할 수 있다.¹⁷⁾

7. 2세, 교육문제, 정체성

미국에서 한인을 포함하여 아시아권 이민자들에 대한 모범적 이미지를 강조하는 모델마이너리티 이미지는 1960년대 이후로 대중매체에 많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 이미지는 아시아계 이민자들을 경제와 학업 면에서 성공적인 적응을 하는 소수민족으로 드러내 왔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 이미지가 확산되기 전에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지배적이었다. 즉, 아시아계 이민자들에 대한 대중적 이미지는 미국내의 정치 경제 상황 국제 관계의 성격, 지배 집단의 가치 등에 의해서 유동적으로 변화해 갔다.

1882년의 Chinese Exclusion Act, 1924년의 Immigration Act 등은 대다수의 미국인이 가지고 있던 아시아계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의 결과였다. 1882년의 Chinese Exclusion Act 는 1943년까지 중국인들의 미국이민을 금지했었고, Oriental Exclusion Act라고 불리는 1924년의 이민법은 일본인들의 이민을 사실상 금지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차별적 이민법은 또한 아시아계 이민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강화시켰다.

대중매체는 아시아계 미국인의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변화시키는데 큰 몫을 담당해왔다. 예컨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미국 신문들은 중국이나 일본계 사람들을 비하하는 용어를 사용하였었다. “an inferior race(열등한 민족)”, “filthy beyond description(말할 수 없이 불결한)”, “aliens whose presence is inimical to health and public morals(공중 도덕과 보건을 해치는 이방인들)” 등이 그 예이다.¹⁸⁾ 하지만 1960년대 중반부터는 아시아계 미국인의 성공스토리가 대중매체와 학술 잡지 등을 장식하기 시작하였다.¹⁹⁾

Chinese Exclusion Act가 발표된 지 100년 후인 1982년에 Newsweek지는 “Asian Americans: A ‘Model Minority’”라는 제목의 글을 선보인다. 이는 중국계, 일본계, 베트남계

17) Okutsu, J. K. 1989. "Pedagogic Hegemonicide and the Asian American Student." *Amerasia Journal*, 15(1): 233-242.

18) Crystal, D. 1989, September. "Asian Americans and the Myth of the Model Minority: Social Casework." *The Journal of Contemporary Social Work*, 405-413.

19) Hurh, Won Moo and Kim, Kwang Chung. 1989. "The Success Image of Asian Americans: Its Validity, and Its Practical and Theoretical Implications." *Ethnic and Racial Studies*, 12(4): 512-538. 성공 스토리들의 예는 다음과 같다. Success Story, Japanese American Style (New York Times Magazine 1966), Success Story of One Group in U.S. (U.S. News and World Report 1966), Success Story: Outwhiting the Whites (Newsweek 1971), Korean Americans: In pursuit of Economic Success (Washington Post 1978), Asian Americans: A Model Minority (Newsweek 1982), To America with Skills: A Wave of Arrivals from the Far East Enriches the Country's Talent Pool (Time 1985), Why Asians Are Going to the Head of the Class (The New York Times 1986).

미국인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담고 있다. 따라서 "unassimilable heathen(동화되지 않는 이방인)"은 "성공적인 모델 마이너리티"로 변하게 된다. 결국 100년동안에 아시아계의 부정적인 이미지는 그 정 반대의 방향으로 옮겨가게 된다.

이러한 변화의 계기는 무엇인가? 이것은 미국의 정치 경제 상황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전기택은 이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²⁰⁾ 1960년대는 미국의 흑인 문제가 국가적 관심을 끌던 시기였다. 흑인들의 권리에 대한 요구가 거세어지자 국가의 가장 영향력 있는 매체들이 아시아계 미국인들을 성공적인 소수민족으로 보도하기 시작하였다.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이러한 보도는 과거의 차별에도 불구하고, 불만을 갖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여 결국 성공한 민족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내었다. 어려운 역경을 극복하고 일어난 민족으로서 다른 소수민족에 대해 귀감이 될만하다는 것이다.

아시아계 미국인들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은 그것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간에 문제의 소지를 제공하게 된다. 예컨대, 아시아계 이민자에 대한 성공적인 이미지는 아시아계 미국인들은 별 문제가 없이 살아가는 소수민족집단이라고 여겨지게 만듦으로써 아시아계 커뮤니티 내에 존재하는 문제나 실제적인 요구에 대해 간과하게 된다. 더욱이 특정 집단의 성공적인 이미지는 비슷한 상황에 있지만 성공적이지 못한 다른 집단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1960년대에 아시아계 미국인들을 성공적인 마이너리티로 그려내어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킴으로써 아프리카인이나 다른 실패한 소수 민족들의 실패는 불평등한 인종제도가나 정책보다는 이들의 부족함이나 나태에 기인하는 것으로 돌리고자 하였다.

여러 연구자들이 실제로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얼마나 성공적인지 또한 모델 마이너리티 이미지는 얼마나 현실적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하였다.²¹⁾ 이들은 타 집단, 특히 주류집단과 비교해서 아시아계 이민자 가족들의 높은 소득은 한 가족 내에서의 임금 노동 종사자의 수, 노동시간, 직업 수준과 교육 수준의 관계 등을 고려해서 살펴봐야 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분석에서 아시아계 이민자 개인의 소득은 주류 사회 개인의 소득과 비교해서 결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²²⁾ 또한 허원무와 김광정은 아시아계 미국인 집단을 동질적인 집단

20) Chun, Ki-Taek. 1980/1995. "The Myth of Asian American Success and Its Educational Ramifications." *The Asian American educational experience*. Edited by D. T. Nakanishi and T. Y. Nishida. NY: Routledge. pp. 95-111.

21) Barringer, H. R., Takeuchi, D. T., and Xenos, P. 1990. "Education, Occupational Prestige, and Income of Asian Americans." *Sociology of Education*, 63: 27-43.

Chun, Ki-Taek. 1980/1995. "The Myth of Asian American Success and Its Educational Ramifications." *The Asian American educational experience*. Edited by D. T. Nakanishi and T. Y. Nishida. NY: Routledge. pp. 95-111.

Hurh, Won Moo and Kim, Kwang Chung. 1989. "The Success Image of Asian Americans: Its Validity, and Its Practical and Theoretical Implications." *Ethnic and Racial Studies*, 12(4): 512-538.

Kim, H. H. and Valadez, J. R. 1995. "Reexamination of Model Minority stereotype: An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Higher Education Aspirations of Asian American Student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Higher Education (20th, Orlando, FL, November, 1995). ED391417.

Suzuki, B. H. 1977/1995. "Education and the Socialization of Asian Americans: A Revisionist Analysis of the Model Minority Thesis." *The Asian American Educational Experience*. Edited by D. T. Nakanishi and T. Y. Nishida. NY: Routledge. pp.113-132.

22) 위의 책

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국가별, 도착 시기 별, 세대별, 거주 지역별로 아시아계 이민자들의 소득 수준은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말한다.

학업 성취에 있어서도 아시아계 이민자들은 동질적인 집단이 아니다. 도착시기, 이민세대, 이민오기 전의 국가, 사회경제적 지위, 거주지역에 따라 다양한 차이를 보인다. 더욱이, 통계 자료는 각 집단의 성취 수준이 과목에 따라, 즉, 수학이나 읽기이나, 혹은 학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인다. 특히 아시아계 학생들 중에서 캄보디아, 라오스, 몽 등지에서 온 이민자들의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으며 학업 성취를 위해 필요한 영어 능력이 부족한 경우도 많다.²³⁾ 아시아권 이민자 뿐 아니라 재미한인의 경우에도 이민을 온 시기에 따라서 거주지역, 생활 수준 등에 따라서 다양한 학업 성취를 보이고 있다. 근래에는 도시지역에 한인 갱들이 조직되고 있으며 이들에 의한 한인집단내의 청소년 범죄 등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한인 집단 내부의 다양한 특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우수한 전문인으로 성장한 재미 한인들과의 연계를 활성화하는 한편 도시의 주변에서 소외당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들에게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또한 재미 동포 2세들의 경우 이민 1세대인 부모 세대와 달리 미국에서 태어나 교육받아 왔기 때문에 한국말보다는 영어 사용이 더 익숙한 경우가 많다. 이민2세대들은 미국 사회의 관습과 문화 속에서 생활하여왔기 때문에 이들을 간단하게 한국인 혹은 한인 1세와 동일시해서 이해하려 하지 말고 이들이 처한 상황적 독특성을 이해하려 해야 할 것이다. 이들은 이민2세대로서 부모의 나라인 한국에 대하여 강한 향수를 품고 자신을 한국인과 동일시하는 학생에서부터 한국은 자신과 무관한 나라라고 여기는 학생도 있다. 하지만 한국이 부모의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을 전혀 도외시하지는 않는다. 이들은 미국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한국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은 누구인지를 다시 되돌아보기도 한다.

특히 대학교에 진학하고 나서 자신의 정체성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는 시간을 갖기도 한다. 백인이 주류인 미국 사회에서 자신을 어느 집단에 귀속시켜야 할 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며 자신이 100%미국인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고민 속에서 한국을 방문하여 자신이 한국인임을 발견하고자 하나 역시 한국에서도 자신은 한국인과 쉽게 동일시되지 않음을 깨닫고 나름대로의 정체성을 모색하는 과정을 갖는 것이다. 이들 중 긍정적인 정체성을 형성해나가는 학생들은 한국과 미국적인 문화요소들 중 자신에게 유리한 것들을 차용하여 건전한 정체성을 발전시키기도 하고 자신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위치에 있는 애매한 정체성을 지니고 있다고 말하는 학생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학생도 나름대로 한국문화 요소와 한국어를 배우고 미래의 직업에 한국어를 사용할 수 있었으면 한다. 결국 재미동포와의 관계 유지에 이들 2세 동포 청년들과의 관계를 제대로 유지하는데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민1세대와 달리 현지의 전문직에 종사하고 주류사회로 진출하고 있는 2세대가 지속적으로 고국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23) Kao, Grace. 1995, February. "Asian Americans as Model Minority? A look at their academic performance." *American Journal of Education*: 121-159.

Ong, P. and Wing, Linda C. 1996. "The Social Contract to Educate All Children." Draft. January 30.

삼바 춤을 출 수 없었던 재 브라질 한인교포사회

- 그 발자취와 세계화 시대의 전망 -

최 금 작 (한국 외국어대학교 포르투갈어과 강사)

<논문 요약>

본 논문은 필자가 상파울루 대학교(USP - Universidade de São Paulo) 철학·문학 및 사회과학대학(FFLCH-Faculdade de Filosofia, Letras e Ciências Humanas) 역사학과에서 대한민국 최초의 공식이민으로 기록된 브라질 한국 이민에 대한 석사논문, 「무지개를 넘어서: 브라질 한국 이민사(Além do Arco-Íris: A Imigração Coreana no Brasil(1991))」를 기초로, 80년대 중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동유럽의 붕괴” 및 “세계화” 현상으로 촉발된, 국제적인 인구이동 현상과 브라질 내에서의 인구이동, 브라질 국경간의 인구이동, 그리고 브라질 내의 소수민족의 움직임과 접목시켜 다시 쓴 글이다.

1963년 제1차 공식 농업이민으로 시작된 재 브라질 한인교포사회는 그 시대적 특징에 따라 5 시기로 구분되는데, 1990년 브라질의 개방화 정책 직전까지 한인 교포의 97%가 상파울루주에 집결하여 살며, 그 중 90%가 “제품”이라고 하는 여성의류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하지만 브라질의 개방화 정책은 많은 교포한국인들의 무역업으로의 전환을 부추겨, 지구 정 반대에 위치한 한국 본국과의 관계를 개선시키며, 양국간의 무역량 증대를 초래했다. 하지만 최근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금융위기의 여파로 브라질 정부의 외채부담이 커지고, 급기야는 1999년 1월 브라질정부 자체가 국제사회의 금융지원을 받게되면서 한인교포사회의 입지도 상대적으로 위축되었다. 또한 설상가상으로 2000년도 1월 산투스 항만청과의 한인 무역업자들의 통관마찰은 한인 교포사회를 경제적으로 어렵게 하고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그들이 걸어온 발자취와 세계화가 진행되는 오늘의 시각에서 다시 바라본 교포사회의 현황과 문제점을 다루어 보고자 한다.

1. 들어가는 말

국제 사회에서의 이민에 대한 인식과 그 중요성은 80년대 중반부터 다시 높아졌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소위 학자들이 말하

는 “제3세계의 이민” 및 “사회이동” 현상으로, 자본주의대 공산주의라는 대립체제가 소련연방 및 동유럽의 붕괴로 무너지자, 세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그리고 이데올로기적 가치에 변화가 생겨, 지구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둘째 경제논리에 바탕을 둔 “신자유주의”와 “세계화” 현상으로 점차 뚜렷이 나타나는 지역적 빈익빈 부익부의 불균등 현상과 세계 곳곳에서 점증하는 이해의 대립과 투쟁들 때문이며, 1) 셋째 자유주의 무역질서로부터 지역의 이익을 보존하고 방어하려는 국가간의 경제블록인 나프타(NAFTA), 유럽연합(EU) 그리고 남미 공동시장(Mercosul)등의 지역 통합체의 형성으로, 좀 더 강한 화폐를 가진 경제적으로 안정된 국가의 국민들이 그렇지 못한 인근 국가로의 이동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브라질은 국가형성의 특성상 “이민”이라는 주제가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언제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자국에 유입되었는지에 따라서 그 나라의 산업부문과 농업부문의 생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포르투갈의 식민 경제의 특성상 16~18세기에는 영국의 노예상인들로부터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수입하여 북동부 지역에서 사탕수수와 면화를 대농장 제도로 생산해냈고, 19세기말에서 20세기초까지 브라질 경제를 주도했던 남동부지역의 커피 경작에도, 흑인노예들이 1888년 노예해방 직전까지 종사했다. 2) 하지만 1889년 공화국의 성립과 함께 브라질 정부는 상파울루주(州), 미나스 제라이스주(州), 그리고 에스피리투산투주(州)의 커피농장에서의 노동력 부족을 유럽의 이민들, 특히 북부 이태리인들로 대체시켰다. 그리고 1908년에는 이곳에 일본이민들까지도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이민 수용 국가로서의 명성을 떨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명성은 현대사에서도 계속되는 것처럼 보였다. 왜냐하면 70·80년대에는 아프리카의 난민을, 그리고 구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되면서 이스라엘이 미처 수용하지 못한 유대계 소련인들, 보스니아 난민들, 그리고 남미의 불안정한 정치 및 경제 상황으로 이웃의 인접 국가들, 특히 볼리비아와 칠레로부터 각각 10만 명과 15만 명의 불법이민자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3) 이러한 현상은 앞에서 설명한 “제3세계의 이민”이나 “사회이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것은 지난 세기 초 브라질 정부가 정부보조금을 동원하여 커피농장의 노동자로서 스페인, 이태리, 포르투갈, 일본에서 데려온 노동이민들과는 그 성격이 전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60년대에 브라질 땅에 밭을 디딘 극히 적은 수의 한국

1) 급격한 인구 하락율을 보이는 유럽의 선진국들이 자국의 산업 발전을 이끌어갈 충분한 인구 성장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 자국의 산업 발전 속도를 유지하지 못할 것이라는 UN의 인구연구소는 “지구 미래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선진국들은 앞으로 50년 동안 이민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라는 결론을 올해 발표를 했다. 동 연구결과는 한 사람의 노령자를 현재 다섯 사람이 부양하고 있지만, 향후 50년 내에는 두 사람이 책임지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선진국들은 새로운 노동력을 이민으로 충당하지 않으면 연금제도의 붕괴는 물론, 매일 매일의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일손 - 식탁에 오르는 따끈따끈한 빵을 만들 사람이나, 지붕에 금이 가 간단한 수리를 하는데 필요한 일손 - 이 부족하게 될 것이라 한다 (「Veja」, São Paulo, 2000/01/12).

2) 브라질의 노예해방은 스페인 식민통치로부터 1820년대에 독립을 이룬 남미의 많은 국가들이 1850년대에 노예해방을 이룬 시기 보다 다소 늦었다.

3) 1995년 통계. 이들은 대부분 의류제조업계에 종사하며 노동법이 보장한 사회 보장 권리도 혜택을 받지 못한 채 낮은 보수를 받으려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News Brasil (95/11/08)」, São Paulo.

이민들과도 그 성격이 다르다.

하지만 8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중반 사이 브라질은 자국의 경기침체로 이민 송출국으로 전환된다. 1985년부터 1995년까지 10년 동안 약 200만 명 - 브라질 경제 유효 인력의 3%, 혹은 우루과이 총인구와 맞먹는 수 - 의 비교적 학력을 갖춘 중산층이 유럽이나 미국·캐나다의 3D에 해당하는 직종을 겨냥하여 이주했다. UN과 같은 국제기구들이 특별한 관심을 보인 것은 결과적으로 이들이 미국에 33만 명, 포르투갈에 3만 명이 불법적이든 합법적이든 간에 정착했기 때문이다.⁴⁾ 그리고 또한 같은 기간 15만 명의 일본계 브라질인들이 “데카세기(でかせぎ)”라는 이름으로 “고용계약”에 의해 일본으로 대거 이동했는데,⁵⁾ 이러한 모든 현상은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에 따른 노동의 이동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90년대 중반 60만 명이나 되는 브라질인들의 파라과이로의 불법이주는 과연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 남미 국가간의 경제블록인 남미 공동시장은 비록 아직까지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라틴아메리카 국가간의 이렇다할 문화 교류를 활발히 촉진시키고 있지는 않지만, 브라질의 1994년도 헤알 정책(Plano Real)의 성공은 파라과이와의 국경 인접지역에서의 브라질인들의 파라과이로의 이동 현상을 가속화시켰다.⁶⁾ 즉, 이것은 남미 공동시장의 형성으로 브라질인들은 파라과이 내에 버려진 비교적 값이 싼 비옥한 토지에 이끌려 불법으로 국경을 넘은 것이었다.

이처럼 세계적으로 이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있는 분위기에서 브라질 학계는 브라질 내에서의 인구이동, 브라질 국경간의 인구이동, 그리고 브라질 내의 소수민족의 움직임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1963년 제1차 공식 농업이민으로 시작된 재 브라질 한인사회의 80년대의 경제적 도약, 모국인 대한민국의 86년 아시안 게임, 88 올림픽의 주최국으로서 세계 속에 자리 매김과 더불어 브라질 콜로르(Collar)정권의 개방정책(1990/06/23) 이후, 삼성과 LG의 전자제품, 현대, 기아 그리고 대우 자동차와 같은 한국 재벌기업들의 국제 자본의 증가로, 브라질 사회에서의 재 브라질 한인사회와 한국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했다. 초창기 그들의 관심은 그들과는 아주 다른 한국인들의 문화, 식생활 그리고 관습 및 예절 등에 대한 호기심과 불법 체류자들로 야기되는 부정적인 시각이 주류를 이루었지만, 지금 그들이 한인사회에 주목하는 것은 비교적 짧은 시기에 여러 가지 “문화적 충격” 등을 잘 견디며, 브라질 의류제조업에서의 활동이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금융위기의 여파로 외채부담이 큰 브라질은 1999년 1월 국제사회의 금융지원과, 2000년도 1월 산투스 항만

4) 「News Brasil (95/11/08)」, São Paulo.

5) 원래 “데카세기(でかせぎ)”라는 말은 고향을 떠나 타향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다른 여는 선진국의 경우처럼 자국의 경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동력이 필요했던 일본 정부가 자기들의 피가 섞인 일본계 브라질 인들에게만 일본에서 일 할 수 있는 권한을 한정적으로 주어, 계약이민의 형태로 일본에 데려간 경우를 말한다. 이들 일본계 브라질인들의 브라질로의 송금액수는 브라질 정부로서는 무시할 수 없는 큰 외화 획득이었기에, 브라질 국영은행인 Banco do Brasil 지점이 일본 동경에 설립되기까지 했다.

6) 브라질 현 대통령인 페르난도 헨리케 까르도조(Fernando Henrique Cardoso)의 이따마르 프랑쿠(Itamar Franco)정부에서 재무장관으로서 입안했던 이 경제 정책으로 브라질 화폐 헤알이 미국의 달러보다 강세를 나타낸 시기에 일어난 현상이다.

청과의 한인 무역업자들의 통관마찰은 한인 교포사회는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이민사회를 체계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2. 연구방법

본 논문은 필자가 상파울루 대학교(USP - Universidade de São Paulo) 철학·문학 및 사회과학대학(FFLCH-Faculdade de Filosofia, Letras e Ciências Humanas) 역사학에서 대한민국의 최초의 공식이민으로 기록된 브라질 한국 이민에 대한 석사학위 논문 「무지개를 넘어서: 브라질 한국 이민사(Além do Arco-Íris: A Imigração Coreana no Brasil(1991))」를 기초로 하였다. 본인이 석사논문 준비 당시만 해도 브라질 한국 이민에 대한 학술적 자료가 전무한 상태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주제에 관한 활자화된 자료 수집에 매달리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한국은 물론 브라질과 미국에서 발간된 모든 종류의 인쇄물 - 신문이나 잡지, 그리고 보고서 및 미국 이민들에 대한 글 - 들을 1956년부터 1990년까지 모두 수집하여 정리했는데, 그 과정에서 풀리지 않는 부분들을 브라질 이민의 산 역사적 증인들 - 브라질 이민 추진 당시 보사부 담당직원이었던 오웅서용, 육군사관학교와 제1차 공식 농업이민 출신으로 초창기 교민 사회의 지도자 역할을 하셨던, 지금은 고인이 되신 조중철용, 60년대 말 한인 교포사회 내분에 있어 가장 중심인물로 떠올랐던, 지금은 미국 서부로 재이민하신 김홍기 변호사, 그리고 그 내분을 해결하기 위해 70년 대 초반 한인회장으로 추대되었던 의사 이영만 박사, 그리고 불법이민자들로 한창 한인사회가 어지러웠던 80년대에 한인회장을 역임하셨던 김성민 변호사 등의 역사적 증언과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역사의 주체는 ‘영웅’이 아니라 ‘일반 민중’이라고 주장했던 불란서 아날학파(Escola Annales)와 영국의 역사가 에릭 홉스바움(Eric Hobsbawm)의 구술역사(História Oral)방법론을 받아들여, 브라질 한국이민의 시대적 특징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재 브라질 교포 35명을 인터뷰하여 모은 증언들을 기초로 했다.

따라서 석사논문에는 당시 한국인들이 조국을 등지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 배경, 브라질 이민 추진 과정, 브라질에서의 적응과정, 세계 어느 민족의 이민 역사와 비교해 볼 때 가장 짧은 기간동안 성공한 케이스로 꼽히는 일명 “제품”이라는 교포사회의 주요 경제 메카니즘인 여성의류업의 형성 과정, 불법이민으로 생긴 교포사회 내의 갈등문제, 다른 인종들과의 접촉으로 생기는 마찰 등을 다루며, 재브라질 교포사회의 브라질 사회의 적응과 미래에 있어 동화현상을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결론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위의 소재들은 세계질서가 매우 빠르게 자본주의 세계체제로 통합되어 가는 시점에 있어 1990년 브라질의 시장개방과 함께 한국 비디오의 브라질 상륙, 자체 라디오 방송국 개국, 그리고 교통의 발달로 한국과의 빈번한 왕래로, 그들의 브라질 사회로의 동화가 오히려 역행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즉 역이민 현상은 물론, 교포자녀들의 한국 유학의 증가 현상, 그리고 교포한인 학교의 개교와 더불어 오히려 한국어와 문화를 더 강조하는 한국화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사무엘 헌팅턴의 “문명의 충돌”이나 하

랄트 필러의 “문명의 공존”, 그리고 앤서니 기든즈의 “문화적 다원주의”등과 같은 논의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1990년 브라질 개방정책으로 야기된 한국 교포사회의 최근 10년 동안의 변화는 한국기업과 상품의 대 브라질 진출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에, 최근의 일련의 사태는 교포사회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세계화가 진행되는 오늘의 시각에서 다시 바라본 교포사회의 현황과 문제점을 다루어 보고자 한다.

3. 문제 제기과 역사적 배경

근대사에 있어서 한국인들의 디아스포라에 대한 역사적 배경은 가까운 중국과 일본의 역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한 현대사에서 브라질 이민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한국 이민을 다루지 않고서는 설명될 수 없다.

아시아의 서양에 대한 문호개방 시기는 그들의 해외로의 이주역사와도 일치한다. 1840년 문호를 개방한 중국은 ‘콜리’라고 불리는 노동자들을 이미 19세기 이전에 페루로 보냈고, 1854년 문호를 개방한 일본의 경우는 1908년 브라질로 진출시켰다. 1876년에서야 강제로 문호를 개방한 조선은 고종황제 시절 1902-1905년 하와이의 ‘사탕수수’ 이민과 1905년의 멕시코의 ‘에니깁’ 이민을 성사시켰지만, 곧 한일합방으로 이민사업은 중단되었고, 또한 이미 앞에서 언급한 이들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배려는 있을 수가 없었다. 따라서 한인들의 공식적 집단이주는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바로 이러한 배경 때문에 한인들의 디아스포라는 중국의 만주, 소비에트 연방의 시베리아, 일본의 사할린 그리고 가까운 동남아 등으로 시작되었다. 브라질 한국 이민사를 다루는 데에도 바로 이러한 우리의 암울한 역사적 배경이 그 시대적 구분을 어렵게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일부 한국인들이 일본국적으로 일본인민 물결과 함께 브라질로 이주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브라질로의 첫 공식 이민의 원년을 1963년으로 간주하기로 한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최초 공식이민이 왜 미국이 아니고 브라질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기게 된다. 왜냐하면 해방과 함께 시작된 미국과의 긴밀한 관계는 한국의 정치 및 경제, 그리고 문화면에서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고, 그것을 마치 입증이라도 하듯, 해외 한국인 보유 1위 국가로 군림하고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으로의 이민은 1965년 새 이민법 Hart-Cellar Act를 발표하기까지 실제적으로 불가능했다. 단지 이 이민법이 발표되기 전 미국으로 이주할 수 있었던 한국인들이란 6.25 때문에 파병된 미군들과 관계를 맺은 여인들이나 그 자녀들, 전쟁고아들, 그리고 소수의 유학생들이었는데, 그 수는 약 3천명에 달했다.⁷⁾

1999년 6월 30일 한국 외교통상부의 자료에 따르면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의 수는 약 5백만으로 추산되는데, 이것은 남한 인구의 11%, 혹은 남북한 전체 인구의 7%정도에 해당한다. 국가별로는 미국(2,057,546명), 중국(2,043,578명), 일본(660,214명), 독립국가연합(486,857명), 캐나다(111,041명), 브라질(46,916명)로 나타나는데,⁸⁾ 브라질 교민은 수적으로는 비록 여섯 번째를 차지하지만, 미국 교포와 비교해 볼 때 1/50에 불과하다. 하지만 브라질과 재 브라질 한인교포사회에 대한 중요성은 현재 한국 전체 교역의 약 2%를 차지하는 브라질과의 관계와 1990년부터 개설된 서울-상파울루 간의 대한항공의 직항로로도 설명될 수 있는데, 그것은 교포의 수가 10만이 넘지 않은 국가와의 직항로 개설은 그만큼 두 나라의 관계 비중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이다.

4. 시대적 이민 유형

1963년 2월 12일 17세대 92명과 11명의 전향군인들이 화란 선박 “찌짜렌카(Tjitjalenska)”를 타고 브라질 산토스 항에 대한민국 첫 공식이민으로 도착하기까지는 1960년대 일본의 영향이 컸다. 당시 일본인들의 중남미 이주는 전체 해외 이주의 77%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 중 85%는 브라질로 이주했다.⁹⁾ 또한 브라질은 1960년 주셀리노 쿠비체크(Jucelino Kubitschek)대통령의 브라질리아로의 수도 천도로 미래의 나라의 상징으로 떠오르고 있었다. 하지만 당시 한국인들은 브라질과 미국의 차이를 알지 못했다. 그들은 해방과 함께 들어온 미군의 영향으로 서양의 모든 나라들이 막연히 풍요로울 것이라는 상상을 하며 브라질로의 이민을 추진했다.

이렇게 시작된 브라질 한국 이민의 역사는 시기에 따라 그 성격과 특징을 달리하는데, 본인의 석사 논문(Choi, 1991)에서 구분한 시대적 5단계는 다음과 같다.

1) 제1단계(1910-1956): 전 이민 단계

이 시기는 전 이민 단계로 두 그룹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첫 번째 그룹은 일제 시대

7) 이광규 (1989), 「在美韓國人」, 일조각.

8) 1991년도 같은 자료에 의하면 한국인들이 거주하는 나라를 순위별로 살펴보면 중국(230만명), 미국(116만명), 일본(68만명), 구 소련(50만명)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중국과 소련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수가 추정치에 불과한 것과, 최근 10년 동안 가속화된 세계화 현상과 관련이 있다. 동기간 동안 라틴 아메리카에서의 한국인 수는 약 2만 명 늘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대부분의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이 90년대 초반부터 신자유주의를 표방한 개방정책에 힘입은 현저한 한국기업들의 대 라틴 아메리카 진출과 관계가 있다.

9) 이 일본 이민 중, 76%가 쌍파울로주(州)에 정착하였는데, 그것은 당시 상파울로 주민의 3% 그리고 농촌인구의 10%를 차지했다. 그들의 근면함과 정직성으로 브라질에 없던 농산물을 생산해낸 일본인들은 브라질 사회에서 무조건 “일본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japonês garantido)”이라는 칭호를 들을 정도로 두터운 신임을 쌓고 있었다.

(1910-1945년) 일본국적으로 귀화한 한국인들이 1908년부터 시작된 브라질 일본이민의 물결과 함께 들어간 사람들이다. 그들 스스로가 한국인을 밝히지 않는 이상 그 숫자를 파악할 수 없지만, 1920년대에 브라질에 발을 디딘 장승호, 김수조...등 10) 은 나중에 한국이민들이 들어와 정착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두 번째 그룹은 6.25전쟁으로 인해 브라질 땅을 디디게 된 50명의 반공포로들인데, 전쟁 발발 50년만에 이루어진 남북 정상회담으로 이산 가족상봉을 앞둔 역사적인 이 순간에, 브라질에 거주하고 있는 이들 반공포로들의 마음의 동요를 우리는 감히 상상해 볼 수 있을까?

이들은 유엔군의 포로로 거제도에 수용된 약 17만 명의 극히 일부분을 차지한다. 대부분의 전쟁포로들은 1953년 6월 23일 이승만 대통령의 반공포로 사면으로 남한의 품에 안기거나, 판문점을 통한 포로 교환으로 고향인 이북으로 돌아갈 수 있었는데, 중국인 포로들을 포함한 88명은 전쟁의 깊은 상흔으로 남한이나 북한 아무 데도 머물기를 원치 않았다. 따라서 이들은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중공군 포로들과 함께 중립국이었던 인도로 향했다. 2년 조건으로 인도에 체류하게 된 이들은, 또다시 자기들이 살고 싶은 제3국을 선택해야 했는데, 냉전시대에 그들에게 관심을 보인 나라는 없었다. 단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만이 예외였기에, 중국인 5명을 포함한 55명의 반공포로들은 브라질을, 8명은 아르헨티나를 택했다. 11) 따라서 브라질을 택한 이들은 1956년 1월 6일 무국적자로 리우 데 자네이루 공항에 도착한다. 12) 이들은 자기들을 받아들인 브라질 정부와 국민들에 감사의 표시로 공항에서 브라질 국가를 불러 브라질 사회의 주목을 끌기도 했다.

2) 제2단계(1961-1962): 준 공식적 이민 단계

이민의 발단은, 1960년 브라질에서 거행된 세계군인사격대회에 참가했던 정인규대령이 대회도중 부상을 당해 입원한 사실이 브라질 신문지상에 보도되면서, 일제시대 일본인들과 함께 이주했던 김수조씨가 13) 그를 찾아온 것이 계기가 되었다. 그들은 브라질 역사상 가장 짧은 기간(6개월) 동안 집권했던 자니우 콰드루(Jânio Quadros) 대통령과의 면담 후, 한국의 농업이민에 대한 승낙을 받게 된다. 14) 한국으로 돌아온 정인규 대령은 브라질로의 이민을 추

10) 그밖에 김창수, 이중창 등이 기록되어 있다.

11) 나머지는 인도여인들과 결혼하여 인도에 정착했다.

12) 이들의 교포사회 내에서의 활동은 한국인들의 브라질 사회 정착과 적응에 궁극적으로 도움을 주게 되는데, 특히 모스코바 유학출신이며 이북의 통역장교 출신이었던 주영복씨는 한인 교포들의 언어에 대한 고통을 덜어주고자 1975년 우리나라 최초로 한·포 사전을 발간하게 된다. 그리고 그 밖에 김중진, 최국주 등이 활발히 활동하였다.

13) 원래 김수조란 사람은 콘솔라쎬용 거리(Rua da Consolação)에서 고가구점을 운영하며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이었는데,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할 때까지, 아오끼 이사부(あおき いさぶ)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그는 재브라질 일본회의 부회장직을 역임했고, 일본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던 그룹 신토 헤메이(しんどう へいめい)의 일원으로 활동하였지만, 일본의 패망과 함께 자기의 이름도 한국명으로 바꿔, "한 알의 밀 알이 죽어 그 싹을 피우는 것처럼" 브라질 한국 이민 사업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게 된다. 이에 한국 정부는 그를 명예영사로 위임하게 되지만, 이민 사업의 중간 과정에서 정부의 신임을 잃게 된다.

14) 처음 콰드루스대통령은 한국 이민을 위해 바이아 주(州)와 마투 그로스 주(州)에 땅을 약속했지만, 나중에 이민 절차를 위해 김수조 명의로 브라질 정부로부터 받은 땅은 상파울루 주

진하기 위해 "한·백 진흥공사"라는 기관을 설립하고 사람들을 모집했는데, 이에 흥미를 보인 사람들은, 주로 5.16 혁명 후 군복을 벗을 수밖에 없었던 군 장교 출신들과 15) 6.25나 1.4 후퇴 때 남하한 이북 출신의 실향민들로 주로 남산교회의 신도들이었다. 이렇게 브라질로의 이민은 정부의 장기적이고 합리적인 이민정책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인 차원의 개인교섭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뒤늦게 이민 절차를 승인하기 위해, 1962년 3월 15일 이민법을 공포하며, 6.25후 전쟁고아나 혼혈아들의 해외입양을 담당했던 보사부를 주무관청으로 지정하기에 이른다. 이렇게 혁명정부가 이들의 브라질로의 이민 절차를 도운 것은 당시 전후 최악의 경제상황(「Newsweek (61/04/03)」)과 실업문제, 1.4후퇴와 6.25로 총 인구의 2/3가 몰린 남한에서 도시의 인구집중현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충돌 및 혼란 예방과 그리고 외화획득 및 비공산국가와의 협동이라는 점이 고려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백 진흥공사에 관련된 정인규 외 14명은, 비록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들은 아니었지만, "문화사절단"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은 한국인을 브라질로 이주시키기 위해, 현장답사의 형식을 띠고 1962년 1월 5일 비행기로 브라질 땅을 밟게 된다. 하지만 이들은 브라질 비자조차도 미국에서 한국 정부의 도움으로 받을 정도로 이민사업에 대한 뚜렷한 계획조차 갖고있지 않았다.

3) 제3단계(1963-1971): 공식적 이민단계

이 공식적 이민 단계도 두 그룹으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 그룹은 위의 문화사절단의 활동의 결과 성립된 5차에 걸친 농업이민으로 1963-1966년 사이 배를 타고 도착한 1,300명이다. 이들은 초기에 농민으로서 브라질 전 농촌지역에 농장들 - '아리랑 농장', '서울 농장', '산타 마리아(Santa Maria)농장', '도나 카타리나(Dona Catariana) 농장', '모범 농장', '파라나 협동 개발(Codepal - Cooperativa de Desenvolvimento do Paraná Limitada) 농장', '아마존(Amazônia) 농장' -을 세워 경영했으나 실패했다. 왜냐하면 이들은 퇴역 장교출신들이거나, 교육을 받은 중산층이며 기독교인들로 도시의 상인출신이었기 때문에, 한국정부의 장려금에도 불구하고, 주위의 열악한 농촌환경과 어려움에 적응할 수 없었다. 이들의 90%는 농민이민 계약기간인 3년이 채 지나기 전인 1966년에 이미 산업 성장에 박차를 가하던 상파울루시(市)로 이주했다. 브라질의 60년대는 산업화와 도시화 현상으로, 북동부 지역으로부터 당시 한창 산업에 박차를 가하던 상파울로와 같은 대도시로의 브라질 농민들의 이농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던 시기였다. 이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역사적으로 브라질의 산토스항에 도착한 유럽이나 일본 이민들을 브라질 전역에 재분배하기 위해 운영되었던 비스콘지데 파라나이바 거리(Rua Visconde de Paranaíba) 1316번지에 위치한 "이민수용소"의 변화된 역할이다. 1963년 이미 1차 한국 공식이민이 여러 가지 혼란 속에서 갈 곳을 찾지 못해 머물렀던 때부터, 그곳은 북동부에서 내려온 이농민들을 수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한국인들의 상

(州)의 까뱁 보니투(Capão Bonito)지역으로 5인 가족을 기준으로 116 세대의 이민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나중에 이민지가 미라까투(Miracatu)라는 지역으로 바뀌면서 많은 문제를 야기시킨다.

15) 군은 해방 후, 한국 사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엘리트 그룹이었다.

파울로의 이주는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에 대한 조치로 브라질 정부는 1968년 한국 농업이민을 금지하기에 이른다.

따라서 두 번째 해당하는 그룹은 농업이민이 아닌 기술이민으로 1,400명이 1971년 브라질 땅에 비행기로 도착한다. 외무부 산하 한국해외개발공사를 통해 모집된 이들은 서류상으로는 기술이민자들이었지만, 실제적으로는 대학졸업장을 갖춘 고학력의 중산층들이나 남대문이나 동대문에서 의류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던 상인들이었다.

4) 제4단계(1972-1980): 불법이민 단계

브라질 정부는 1972년 또 다시 한국인 이민 억제 정책을 쓰는데, 이러한 조치는 사실상 한인들의 지속적인 브라질 유입을 막지는 못했다. 왜냐하면 60년대 말 서독에서 광부나 간호원으로 일했던 사람이 결혼하여 대부분이 미국으로 "삼각이민"을 했는데, 그 중 일부가 브라질을 택했고, 베트남에서 일했던 계약노동자들도 계약기간이 끝나자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제3국을 거쳐 미국이나 브라질로 들어갔다. 또한 70년대 초반에는 태권도 사범들의 미국이나 브라질 진출도 눈에 띄게 늘어났다.

이렇게 70년대 한국인들의 해외 이주에 대한 열망은 남북이 대치된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치적 상황 - 1972년 한반도에서 미군의 철수를 주장한 닉슨 독트린, 1975년 미국의 패전으로 끝난 베트남전쟁 - 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또한 1976년 휴전선에서 발생한 도끼 만행사건은 전쟁재발에 대한 공포로 많은 사람들이 구한말의 유민(流民)이나 기민(饑民)과는 다른 도피이민(逃避移民)의 성격으로 한국을 떠나게 했다. 때마침 1976년 개정된 미국의 이민법으로 친지초청이 가능해 지면서 매해 약 3만 명의 한국인들이 약 10년 동안 미국으로 들어갔는데, 미국의 이민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사람들은 먼저 파라과이나 볼리비아를 택했다. 1985년 외무부 통계에 의하면 75년에서 77년까지 파라과이 비자를 받은 사람이 1만 명이 넘는데, 이들은 나중에 아르헨티나나 브라질로 재 이주했다. 그리고 이들 대부분이 브라질을 택했다고 추정할 수 있는 근거는 그들이 서울의 어느 종로 외국어학원에서 익힌 언어가 스페인어가 아닌 포르투갈어였다는 데에 있다.

5) 제5단계(1980년부터 현재까지): 연쇄 이민 단계

가족이나 친족에 의한 초청이민으로 앞에서 언급한 이산 가족을 포함한 한국이민이 꾸준히 유입되는 시기이다. 90년대 브라질의 개방정책이 있기 전까지 한인교포들은 남한의 87배나 되는 거대한 브라질 영토 전역에 흩어져 사는 것이 아니라, 남미 최대의 상업도시로 알려진 상파울루시(市)에 96.84%가 집결하여 살았다. 그리고 그 중 약 90%가 직·간접적으로 봉혜찌로(Bom Retiro)와 브라스(Brás) 구(區)의 여성 의류업 분야에서 생산과 도매 및 유통분야에서 서로 얽혀 경제적으로 안정과 번성의 시기를 구가하는 시기이다.¹⁶⁾

또한 이시기는 브라질 정부의 3차에 걸친 불법 체류자 사면 - 1980년, 1988년, 1998년 - 으로 한국 교민사회는 오히려 안정과 번성의 시기를 구가하는 시기이다. 하지만 80년대 중반에는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기반을 잡은 한국인들의 미국으로의 재이민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90년대에는 개방정책과 함께 그 동안 "여기는 브라질이야(Aqui é Brasil)!"라는 말로 서로가 대등하다고 생각되던 교포사회의 한국인들 사이에서도 빈부의 차가 생겨 계층이 분화되는 현상과 함께, 거주지 이동 현상이 나타난 시기이다. 따라서 부(富)를 축적한 사람들은 봉혜찌로와 가까우며 교육환경이 좋은 유대인의 거주 지역, 이지애노폴리스(Higienópolis)구(區)로 옮겨가는 한편, 다른 사람들은 상파울루주(州)의 다른 도시들이나, 다른 주(州) 수도, 아니면 미국으로의 불법이주나 한국으로의 역이민을 했다.

5. 교민사회의 형성

근대 한국사의 비극에서 발생한 이민의 제1단계에 해당하는 일제시대의 한인들이나 반공포로들은 나중에 들어오게 되는 한국 공식 농업이민들의 밑거름이 되었다. 특히 '미다 할아버지'라 불리우던 장승호¹⁷⁾와 같은 사람은 나중에 반공포로들이 들어왔을 때, 그들 중의 한 사람을 사위로 맞으며 그들의 브라질 생활적응에 절대적 힘이 되었고, 이들 두 그룹 모두는 다음에 들어오는 한국 이민자들의 브라질 생활의 길잡이가 되었다. 특히 반공포로들의 경우,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한국이민으로, 한국 여인들과의 결혼이 가능해지면서 - 이미 브라질 여인과 결혼했던 사람들도 다시 한국여인들과 재혼함으로써 - 자연스럽게 한국 교포 사회에 흡수되었다. 특히 한국과 브라질의 관계가 활발하게 전개되기 시작한 90년 초반에는, 그 동안 한국 교포사회와는 단절되어 브라질 원주민만을 대상으로 목회활동을 하던 반공포로 출신의 목사들 - 강석근, 강희동, 문명철 - 까지도 한국 사회에 편입되게 되는데, 그 이유를 교포사회의 지도자들이 2세들의 교육 및 신앙생활 선도에, 믿음 좋고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던 포르투갈어 구사에 능한 그들을 초빙했기 때문이라고 간단히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이는 경제적으로 날로 팽창해 가는 고국과 한국기업들의 브라질 진출 그리고 한국 교포사회의 경제적 번영이 그 동안 조국과 교포사회로부터 멀리 떨어져있던 이들과 이들의 자녀들을 끌어안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여성의류업계의 한인사회의 분위기는 같은 관심과 목표를 갖은 한국인들끼리의 결혼을 더욱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어, 배우자를 이웃의 남미국가들은 물론, 북미의 미국이나 캐나다, 그리고 본국인 한국에서까지 찾는 경향을 보이며 확장되고 있다.

16) 90년 시장개방정책의 바람이 불기 직전까지의 통계임. in: 최금좌 - op.cit.

17) 그의 원래 직업은 쌀장사로 80이 넘어서도 쌀 한 가마를 지고 다닐 정도로 정정했는데, 2000년 4월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1) 한인촌

일반적으로 한 지역의 이민촌 형성은 지역적 조건과 직업분야에 따라 그 집결도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70년대 초반 상파울루시(市)에 도착한 한국인들은 이미 일본인들의 거주 지역 리베르다지(Liberdade)와 가까운 글리세리우(Glicerio)길과 콘지 데 싸르제다스(Conde de Sarzedas) 길 사이에 “한국인 촌”을 형성하였다. 이곳은 집세가 비교적 싼고, 시내 중심가 근처에 위치했을 뿐만 아니라, 일제시대 교육받은 사람들의 일본어 구사로 브라질 사회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었다. 그러나 이곳에서부터 현재 한인들의 삶의 터전이 된 봉헤지로(Bom Retiro)로의 진출은 훨씬 이후에 발생하게 된다.

70년대 한국인 촌의 상황에 대해, 브라질 한국 공식이민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중앙일보(1973/09/15)는 “상파울루의 한국인 촌의 상황은 매춘, 범죄, 가난으로 점철된 최악의 위생 상태를 지닌 흡사 지옥과 같다”라고 보도하고 있다. 또한 당시 한국인 촌에 거주하던 사람은 “우리는 그곳에서 마치 6.25전쟁기간 동안 피난민처럼 살았다. 옷장이나 침대와 같은 가구도 없이... 옷을 보따리에 보관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우리들은 항상 언제든지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며 살고 있었던 것 같다. 그 누구도 위생 문제 같은 것에는 신경을 쓸 틈이 없었다. 우리의 관심은 오로지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하는 문제였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민자들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왜냐하면, 주위의 환경보다는 한국의 문화와 풍습이 전혀 다른 브라질 문화와 풍습으로부터 “문화적 충격”을 감소하고, 그 동안 한국인들이 형성해 놓은 생존 메카니즘 안에서 기술을 전수받기 위해, 친척이 있던 사람이든 아니든 간에, 그리고 돈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든 아니든 간에, 동포들과의 공존을 추구하며 어김없이 “한국인 촌”으로 찾아 들어갔다. 포르투갈어에 대한 무지, 거기에서 오는 상호 협력을 유지하려는 기대, 그리고 같은 동포들과 함께 공존한다는 위안 등은 한국인들을 그곳으로 모이게 한 주요 요인이었다. 이민당시 한 사람 당 소지할 수 있었던 외화가 극히 제한되어있었으므로, 초기 농업이민 때부터 배가 닿는 항구마다 사람들은 브라질에서 팔 물건을 사들였다고 한다. 따라서 이러한 물건을 팔기 위해 처음에 가가호호를 돌며 행상으로 시작한 한국인들은 시간이 가면서 직접 당시 유행하던 미상가(miçaga)라고 불리던 구슬 백이나 의류를 생산해 냈다. 이 때 한인촌의 아침 출근광경으로 독일 딱정벌레차 푸스카(Fusca)의 행렬을 볼 만 했다고 하는데, 이 때부터 교포사회의 남자와 여자들의 역할이 바뀌게 된다. 브라질 사람들이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에게 경계심을 덜 보였으므로 여자들이 가가호호를 돌며 물건을 파는 동안, 남자들은 차에서 아이들을 돌보았다고 한다.

이렇게 한국인 촌은 브라질의 경제상황, 특히 의류업계 분야에서의 가능성에 대한 정보 수집을 위한 근본 터전이 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동포와의 접촉과 생계문제 해결을 위해 속속들이 몰려들었다. 1971년 기술이민자들도 브라질 땅을 딛자마자 곧장 상파울루시(市)의 한

국인 촌으로 향했는데, 이들 중에는 이미 한국의 남대문, 동대문에서 의류업에 종사하던 전문인들이 끼어, 이 분야를 더욱 발전시키게 된다.

2) 불법체류자

초창기 한국 농업이민자들의 도시로의 이농현상으로 브라질 정부가 1968년 더 이상의 이민을 허용하지 않자, 문화사절단으로 들어온 14명과 1차 공식이민 때 함께 들어온 한·백협회의 11명의 전향군인들이 따로 추진하던 이민사업에 이상이 생겼다. 따라서 이들을 믿고 이민을 준비하던 사람들은 브라질 정부의 이민금지 조치에도 굴하지 않고 볼리비아와 파라과이를 거쳐 불법으로 브라질로 들어갔는데, 여기서 우리가 유의할 점은 이민 사업을 추진하던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군출신으로 재브라질 한국공관 관료들과 쉽게 친분을 쌓을 수 있었던 계층이고, 이들의 사업에 동참하여 브라질로 이주했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북출신으로 남한에 적응하지 못하고 브라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나중에 불법이민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당시 전체 교민수의 1/4에 해당하는 1천명이 되면서, 그 갈등은 1969년도 한인회장 선거와 8.15행사를 정점으로 표출된다. 재 브라질 한인 교포사회는 이 사건을 일명 “신파와 구파의 싸움”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 갈등은 브라질 정부가 1969년 법령 제 944조 - 1945년 제정된 법령 7967조와 브라질인으로서의 귀화법을 무효화시키면서 - 에 의해 한인 불법체류자들을 사면하면서 점차 약화되게 된다.

하지만 70년대에도 계속되는 불법체류자들의 브라질로의 유입은 한국정부를 비롯하여 교포사회의 커다란 문제였다. 필자가 석사논문의 제목을 “무지개를 넘어서”라고 붙인 까닭은 한인들의 무조건 한국 탈출과 특히 남미에서 삼엄한 경계를 뚫고 브라질로의 월경 과정을 미래를 위한 도전과 투자로 해석했기 때문이다. 파라과이에서 브라질로 월경할 때 체포당한 한 교민의 말을 빌리자면 “여섯 살 난 딸아이는 이민 브로커를 통해 이미 상파울루에 산다는 어느 모르는 한국여인과 함께 미리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어린 아들은 가짜 서류를 마련하여 브라질 국경을 버스를 타고 넘게 했는데, 무사히 넘은 것을 확인한 후, 내가 혼자 버스를 탔습니다. 그런데 재수 없게 걸렸어요.”라고 그 때를 회상했다. 하지만 결코 쉽지 않았던 브라질로의 불법이민 과정에서 체포된 그는 파라과이 감옥에서조차 “손바닥만한 비프 스테이크와 쌀밥!”이라는 남미의 풍부한 식단(?)에 감탄해 마지않으며, 택시 기사를 하던 한국에서보다는 브라질에서의 미래가 더 확실하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이러한 한국인들의 불법이민은 당시 남미국가간의 정치 및 경제적 환경에 기인한 이웃 국가들의 남미인들의 불법이민 물결과 일치했기에 당시 브라질 군사 정부는 이들을 경계했다. 그들은 이들 불법이민자들이 자기들의 정권을 전복시킬 수 있는 “불순 세력”이라고 판단, 법무부를 위시하여 연방경찰, 비밀경찰, 군대와 함께 “이민자들에 대한 작전”과 “불법체류자 체포 작전”을 마토 그로스주(州) 고이아스주(州) 산타 카타리나주(州) 등 브라질 전역에 폈다.

<불법이민자들의 브라질 월경 경로>

▶ 파라과이 아순시온을 통한 경로

- 1) Foz de Iguaço - Cascavel - Curitiba - São Paulo
- 2) Foz de Iguaço - Cascavel - Maringá - Londrina - São Paulo
- 3) Pedro Juan Cabaleiro-Ponta Porã - Presidente Prudente - São Paulo
- 4) Pedro Juan Cabaleiro-Ponta Porã - Dourados - Rio Brillhante - São Paulo
- 5) Pedro Juan Cabaleiro - Ponta Porã - Dourados - Campo Grande - São Paulo

▶ 볼리비아를 통한 경로

- 1) Porto Juaréz - Corumbá - Campo Grande - Bauru - São Paulo

이에 한국정부는 악화된 두 나라의 관계를 개선하고, 한국인들의 불법이민에 대한 문제해결과 궁극적으로 라틴 국가들에 만연되어 있는 한국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한편으로는 1977년 5·4 조치를 내리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불법체류자들을 구제할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5·4 조치란 한국정부가 오히려 남미 국가로의 이민을 일방적으로 차단한 것인데, 이 조치는 결과적으로 뜻하지 않은 이산가족들을 양산되었다. 어떤 가족의 증언을 들어보자. “이민에 대한 모든 준비가 끝났는데, 군에 간 아들이 걸렸어요. 다행히 제대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기에 우리는 먼저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6개월 후에 따라오기로 했던 아들은 이 조치로 브라질로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아들은 혼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결혼도 하고, 자식을 둘씩이나 나서야 우리에게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다시 만나게 된 것은 헤어진지 꼭 10년 만이지요.”

한국정부의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구제 방안은 60년대 한국정부가 미화 68만 불을 투자하여 만든 아르헨티나의 라 마르케(La Marque) 농장이나 파라과이의 산 페드로(San Pedro) 농장의 경험을 되살린 것이었다.(동아일보, 76/10/27) 재 브라질 한국 대사관은 리우 데 자네이루에서 수도 브라질리아로 옮긴 후, 그곳에서 80km 떨어진 곳에 1,500 알케르의 땅을 한국 대사관 명의로 273만 불에 구입한다. 당시 상파울루시(市)를 중심으로 한 한국이민 사회 내에서는 이 불법이민자들을 보호하던 교회가 주축이 되어 오히려 한인들의 단결과 상부상조가 활발히 이루어졌는데, 이 때 한인 교회들의 역할은 한인교포사회의 수적 증가나 경제 규모에 있어 확장의 계기가 된다. 한국 대사관은 상파울루시(市)에서 한인 불법이민자들을 적극적으로 돕던 대한성결교회 이석호 목사를 앞세워 새로 구입한 땅에 “새마을 십자농장”을 설립했다. 총 366만 불이 투자된 이 농장에 브라질 정부는 한인 불법체류자들이 이 농장에서 5년 동안 농사를 짓는다면 영주권을 발급해줄기로 합의를 하지만, 이미 상파울루 도시 생활을 경험한 한인들은 아이들 교육문제라든가, 당장 먹고살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신변 안전 문제를 들어 농장을 이탈했다. 이것은 당시 상파울루 도시의 경제 확장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또한 설상가상으로 INCRA라고 하는 브라질 농업협동조합은 이 땅에 대한 한국대사관의 소유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한국정부는 결국 기증하는 형식으로 땅을 빼앗기게 되어(Korea Herald, 83/06/18), 한국정부의 불법체류자들의 신분을 합법화하고자 하는 노력과 투자자본은 어이없이 물거품이 되고 만다.

새마을 십자농장과 관련되었던 당시 불법체류자들의 대부분은 1980년 사면령으로 영주권을 획득하는데, 이 때 사면받은 불법체류자들은 4,500명으로 혜택받은 인구 총 15,351명의 거의 1/3을 차지했다. 사면령이 내리기 전의 한 불법체류자의 증언을 들어보면, 과연 그들의 고충이 어떠한지 조금은 상상할 수 있다. “남편은 파라과이에서 넘어오자마자 웬지 시름시름 앓았습니다. 불법체류자라 의사한테 가본다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주위의 같은 한국 사람이 자기의 의료보험증을 빌려주며 같이 병원에 가지고 가기에 따라갔어요. 다행히 브라질 사람들이 우리 동양인들 얼굴을 잘 구별하지 못하기에 병원에서 진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장암 말기였기에 3개월 동안 치료를 받다가 집으로 다시 모셔왔지요.”

사실 상파울루시(市)에서의 불법이민자들의 존재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브라질 사회와 교포사회에 커다란 짐이 되기도 했지만, 특히 80년과 88년 사이의 불법이민자들은 어떤 면에서 팽창을 거듭하고 있던 한인사회의 노동집약적인 의류 봉제업에서 값싼 노동력을 의미했기 때문에 성장의 원천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브라질 사람이 보기에 “노예”와 다름없던 값싼 동족의 노동력은 의류 제조업 부문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힘을 축적하게 하여, 현재의 여성의류업계, 즉 “제품”업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당시 봉제업을 하던 한 아주머니의 증언을 들어보자. “바나나를 천장에 달아놓고 일을 했어요. 밥해 먹을 시간이 가까웠습니다. 저는 세 아이들의 생계를 혼자 책임져야 했기에 이를 악물고 일을 했습니다. 여섯 살 난 제 딸은 제 옆에서 실밥을 뜯어주고, 동생들 밥을 챙겨주었지요. 저는 미싱 앞에서 수 없이 많은 밤을 샜습니다. 제게 일을 맡긴 사람이 어김없이 아침 여섯 시면 물건을 찾으러 오기 때문이었지요. 저는 그 때 얻은 당뇨병으로 지금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지만, 그 때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불법이민자들의 존재는 한국 교포 사회 내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이기도 했지만, 역설적이게도 협동과 단결의 요소로서 작용했다. 즉 양날을 가진 칼로서 기능했던 것이었다.

이들의 이러한 일에 대한 대가는 1~2년 안에 가시적으로 나타났는데, 이들도 그 동안 축적한 자본으로 영주권을 가진 다른 사람의 명의로 그들 보다 먼저 온 사람들의 전처를 밟아 자기들만의 가게를 갖게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90년대 중반부터 봉제업에서의 이러한 현상은 같은 한국인들끼리라기보다는 대신 볼리비아 불법체류자들로 대체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브라질 시사잡지 Veja(98/05/13)는 1998년 사면이 일어나기 직전, 한국인들이 그들을 노예처럼 부린다면 브라질 사회의 문제로 대서특필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볼리비아 불법체류자들에 의해 한국인들의 봉제업에서 밀린 한국인 불법체류자나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한국 이민자들은, 이전과는 달리 한인교포사회가 필요로 하

는 분야에 종사하여 한인사회의 계급적 다양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그 이전까지 교포사회에 존재하지 않았던 분야에 종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즉 예를 면, 밀반찬이나 떡을 만들어 파는 업종과 가전제품 수리, 구두수선, 미장원, 이발소와 같은 분야가 발전하기 시작한 것이다.

브라질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브라질 여자와 결혼하거나 그 곳에서 브라질 땅에서 아이를 낳거나, 아니면 워처럼 사면령의 혜택을 받는 것인데, 이 시기를 놓친 사람들은 이미 많은 자식이 있음에도 또 다른 아이를 갖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다. 그것은 한 아이의 탄생으로 다른 나머지 가족들의 영주권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브라질 사회에서 새로 태어난 아이가 남아이든 여아이던 간에 때때로 “영주”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까닭은 가족의 “영주권”을 해결해 준 아이의 탄생을 기념하고자 하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하겠다.

3) 교민사회의 중추사업인 의류업의 메카니즘

원래 브라질의 여성의류 업계는 봉혜찌로(Bom Retiro)를 중심으로 유대인과 아랍인들의 영역으로 간주되었었다. 하지만 70년대 이미 한국 교포사회는 이미 이 분야에 조금씩 진출해 들어가, 생산자와 소·도매 부분을 장악했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브라질 땅에 발을 디디면서 처음 시작하는 일은 판매인(vendedor)이라는 중개상인 역할이다. 이들은 의류 생산업자와 소매업자들 사이를 왔다갔다하며 물건을 대주고 발리(vale)라고 하는 일종의 약속어음과 같은 것을 받아다 주며 브라질 상황은 물론 일의 메카니즘을 익히게 된다. 1년 정도 이 일을 하면서 약간의 자본을 축적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는 단추 기계나 재봉틀을 마련하여 봉제소(封齋所)를 차리게 된다. 소규모 가내공업형태로 브라질 사람들을 3~4명 고용하여 1-2년 일을 하면 더 많은 자본을 축적할 수 있게 되는데, 그 마지막 단계로 자기 자신의 가게를 소유하게 된다. 한인들이 이렇게 한가지 일에 몰두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일을 옮겨가며 하는 까닭은 각 단계마다 취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다르기 때문이다. 한인교포사회 내에서 각 사람이 하는 일의 성격에 따라, 그 사람의 이민 경력과 자본을 어느 정도 비례로 추측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자연스럽게 직업에 따른 편견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10년 동안 한 가지 일, 즉 단추만을 달았다던가 봉제(封齋) 일만을 했다던, 그 사람은 무능력자로 생각되어진다. 왜냐하면, 의류업계에서는 직업을 단계적으로 변화를 시키는 것이 정석(定石)이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그들의 가치의 판단과 사고방법은 그들 사이의 직업적 귀천의식이 존재함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들의 경제활동 영역은 90년대 이전까지 원사(原絲)나 직물(織物)제조 등의 생산분야나 또는 직물의 염색 분야에는 진출하지 못하고, 단지 의류 봉제업과 생산업에 국한되어있었다.

80년대 여성 의류업이 발전하게 된 또 다른 원인으로는 브라질에서 정식으로 교육받은 대학 졸업자들이 자기들의 전공과는 관계없이 이 업계에 뛰어들었다는 사실을 꼽을 수 있다. 인플레이가 한창 기승을 부리던 시절, 그들이 여성의류업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전문직에서 얻을 수 있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았다. 따라서 여성의류업이 한창이던 80년 대 중반 어떤

사람이 의사 자격증을 따자, 그 주위 사람들이 “의사 자격증은 화장실에나 갖다 걸고, 봉혜찌로로 진출하라”라고 충고할 정도로, 전문직에 종사하던 많은 사람들이 결혼과 함께 양가의 도움을 받아 이 업종으로 쉽게 전환하게 된다. 브라질 사회와 언어에 능한 이들 교포사회의 엘리트들의 의류업으로의 전환은 그들의 교포사회로의 흡수를 의미했다. 따라서 초기 한인사회는 이러한 현상을 브라질 사회로의 진출이나 교포사회의 다양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우려를 낳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여성 의류업을 한국 교포 사회의 사업으로 확장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봉혜찌로의 프로페소르 롬브로주 거리 (Rua Professor Lombroso)의 대부분은 유대인들의 큰 거리의 상가를 피해 들어온 한인들만의 거리가 되었다. 하지만 이 거리에 가게를 갖고 있는 주인의 말을 빌면 “유대인의 휴일 날 이곳에 와보세요. 봉혜찌로가 텅 비지요. 아직도 이곳은 유대인들의 지역입니다. 대부분의 건물 소유주들이 그들이구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다 그 사람들한테 갖다 바치는 것이나 다름없어요.”라고 말한다.

90년대의 브라질 개방정책과 함께 브라질 교포들의 이 업종은 브라질 내에 한정되지 않고, 다른 남미국가의 시장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세계화의 시대적 조류에 걸맞게, 특히 로스 엔젤레스의 “자바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미 브라질에서 의류 제조업에서의 경험을 쌓은 재민자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한국의 동대문 및 남대문 상가까지 연계를 갖고 발전과 확대를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 교통과 통신의 발달, 브라질의 시장개방 정책과 함께 브라질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이민사회의 주력사업인 의류업 관련 사업을 측면 지원하는 효과까지 가져오고 있다.

또한 개방정책과 함께 나타난 현상은 교포남자들의 무역업으로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동안의 남자들의 역할이란 여성의류업이라는 업종의 특성상 원단 및 색상 그리고 단추나 지퍼와 같은 부속품들에 대한 선택권을 여자들이 가지고 있었기에 이렇다 할 만한 역할이 없었다. 따라서 남자들 스스로가 “단지 집에서 가게까지 여자들을 차로 데려다 주고 가게문을 열어주는 ‘기사’ 역할이나 오전 중 가게의 장부를 정리하여 은행 일을 처리해 주는 ‘회계사’의 역할만을 할 뿐”이라고 비하하기도 했다. 가게문을 닫을 시간까지 낮 시간을 남자들은 가까운 골프장 같은 곳에서 시간을 때우기가 일 수였는데, 한인사회의 수많은 친선단체들과 그들의 활동들은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6. 맺음말

올해는 포르투갈의 항해사 페드로 알바리스 카브랄(Pedro Alvares Cabral)의 브라질 발견 500주년이 되는 해이다. 브라질의 유명한 역사학자 세르지우 부아르케 데 올란다 (Sérgio Buarque de Holanda)는 1500년 발견 당시부터 유럽인들은, “파라다이스에 대한 환상”으로 브라질로 들어왔다고 언급하고 있다. 과연 이러한 낙원에 대한 전통적인 환상과 자연의 풍부함 때문에 브라질은 아직도 한국인들에게 매력적인 곳이라 할 수 있을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지구상에서 이민을 포함한 인구 이동은 세계화가 무차별하게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 있어, 점증하는 경제적·사회적 불균형을 반영하는 것이라 주시할 필요가 있다. 브라질 한인교포사회를 살펴볼 때, 한편으로는 일부 한국인들이 현 브라질의 이민 물결과 함께 다른 나라로 가고 있는 반면, 다른 한편에선 또 다른 한국인들이 계속해서 상파울루의 한인촌(韓人村)이나 봉헤찌로구(區), 브라스구(區)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

또한 새롭게 들어오는 후속부대에 의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점차 강화되는 시점에서 한국의 비디오 테이프 및 신문 잡지의 영향은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데, 이것은 오히려 한인교포들의 브라질 사회로의 동화를 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 즉, 재브라질 한인교포들은 브라질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보다는 오히려 한국의 정치·사회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언어장벽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한인교포들은 브라질의 보통 사람들처럼 축구나 카니발과 같은 문화를 즐길 시간 및 마음의 여유를 갖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특히 카니발과 같은 모처럼의 긴 연휴에는 여성 의류업계에서 필수인 새로운 유행모델을 구입하기 위해,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나 주부는 유럽이나 미국 그리고 한국까지의 여행을 어김없이 하고 있기에, 여타의 일반 브라질 사람들처럼 브라질 문화를 향유하며 즐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까지 살펴본 한국 교포사회는 다른 종족과의 혼합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로 브라질 사회와 문화로부터 폐쇄적으로 유지되어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다른 인종과 문화로부터 모국어와 문화를 지키려는 초창기의 한인 사회의 노력 - 모국어와 모국 문화의 가치를 지키려는 노력은 너무도 강해 브라질 한인회, 40여 개의 교회들, 성당을 비롯하여 주일학교와 그 밖의 토요학교들, 한인사회의 경제적 성장력의 원천인 “계”의 유지, 다양한 공동 이익 단체, 동창회, 향우회, 한국과 관련되거나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신문사들, 그리고 자체적 라디오방송 - 을 높이 살 수도 있겠으나, 이러한 현상은 재브라질 한국이민사회의 역사가 짧아서 생기는 당연한 현상일까? 아니면 이민 초창기부터 한국인들이 브라질 사회에 안주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 제3국 특히 미국으로의 재이민(再移民)을 목표로했다고 풀이할 수 있는 것일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자유주의 무역질서를 앞세우는 세계화의 진행상태에서 오히려 한 국가의 문화와 언어의 유지가 오히려 더욱 강조될 것이라는 가정의 시대적 소산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영국 런던대학 경제학 교수 앤터니 스미스는 “전례없는 사회변동의 시대에 그렇게 많은 민족과 민족주의가 유지되도록 만들며 또 기술적인 통일과 총체적인 효율성의 시대에 사라지게 운명지어진 것 같았던 수많은 소수 종족들을 되살아나게 하고 있는” 현 시대에 있어서의 민족은 “그것이 줄 수 있는 어떤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넘어서서 죽음과 망각에 의연히 맞서도록 하는 집단적인 그리고 지상에서의 불멸성의 약속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민족문화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이것이 민족의 삶 속에서 형성된 생산물이자, 민족의 지향과 목표달성에 도움을 주는 선도물의 양면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민족과 민족문화는 현 시기 결코 소멸되거나 초월할 수 없는 개념으로,

초국적 자본주의가 막강한 힘으로 행사하는 국제적 단위의 통합에 맞서 그것을 상쇄하고자 하는 아래로부터의 저항을 민족이나 문화권들 고유의 동질성과 다양성 그리고 정체성을 찾으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되고 있기 때문에, 브라질에서의 한국교포들의 존재는 21세기 한국 정부의 국익과 더욱 더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게 될 것임으로, 한국 정부로 보았을 때 아주 귀중한 자산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금년으로 37년의 이민 역사를 가진 재 브라질 한인사회는, 이제 언어의 장벽을 느끼던 초창기 1세대와는 달리, 그들의 1.5~2세대의 브라질 주류사회로의 진출을 은근히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제1세대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브라질 친구들과의 관계, 브라질의 신문과 방송, 그리고 브라질 학교를 통한 브라질 문화와의 접촉을 상쇄할 수는 없을 것이고, 매스 미디어가 발달한 요즘, 제2세대들의 브라질 사회로의 동화와 점진적인 진출은 하나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참고 문헌>

- 김성렬 (1966). “적도하에 심은 코리아”, 「신동아」, 6월호
- 김시봉 (1987). “남미환상곡”, in: 「새생명」, São Paulo, Nov.
- 이광규 (1989). 「在美韓國人」, 일조각.
- 이구홍 (1979). 「韓國移民史」, 서울, 중앙신서.
- 이규석 (1979). “재회길 막힌 ‘이민이산 가족’”, 「동아일보」, 서울, 79/10/11.
- 이인길 (1983). 「송암문학전집」, São Paulo, 한국일보 출판사.
- 정연권 (1961). “브라질의 우리교포”, 「동아일보(61/07/18)」, 「중앙일보(73/09/15)」, 「동아일보(76/10/27)」, 「Korea Herald(83/06/18)」, 「News Brasil」, São Paulo, 95/11/08. 「O Estado de S.Paulo」, São Paulo, 56/02/07. 「Veja」, São Paulo, 98/05/13. 20/01/12 p.118-119.
- CHOI, Keum Joa (1991) - Além do Arco-Íris: A Imigração Coreana no Brasil (무지개를 넘어서: 재 브라질 한국이민사), Dissertação de Mestrado da USP(상파울루 주립대학 역사학과 석사논문).
- CHOY, Bong Youn (1979), Koreans in America, Chicago, Illinois, (번역본 최봉윤(1983), 「미국속의 한국인」, 종로서적)
- CRUZ, M. - “Coreanos entram irregularmente, via Paraguai”, 「Folha de S. Paulo(82/02/06)」, São Paulo.
- HOLLANDA, Sérgio Buarque de Holanda (1969), Visão do Paraíso, São Paulo.

Edit. Nacional-Edusp. 1969.

HUTTER, Lucy Maffei (1986), A imigração Italiana em São Paulo de 1902 a 1914. O processo Imigratório. São Paulo, Instituto de Estudos Brasileiros, Universidade de São Paulo.

IANNI, Octavio (1987), Raças e Classes Sociais no Brasil, São Paulo, Edit., Brasileira.

KIM, Hyung Chang (1977), The Korean Diaspora, Santa Barbara, CA., ABC-Clío, Inc.

KIM, Ill Soo (1981), New urban Immigrants - The Korean Community in New York,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LIMA, Oscar Resende de (1960), "Aspectos Psiquiátricos dos Imigrados", Jornal Brasileiro, São Paulo, 9(3).

PATARRA, Neide Lopes(coord.) (1995), Emigração e Imigração Internacionais no Brasil Contemporâneo, v.1. Campinas, FNUAP.

_____ (1996), Migrações Internacionais : Herança XX Agenda XXI, v.2, Campinas, FNUNP.

NOGEIRA, Arlinda Rocha (1987), Imigração japonesa na história contemporânea do Brasil, São Paulo, Edit. Massao Ohno/Centro de Estudos Nipo Brasileiros.

PETRONE, Maria Tereza Schorer (1977), "O imigrante em São Paulo", In: O Brasil Republicano, São Paulo, Difel/Difusão Editorial S.A., Vol. 20, Sociedade e Instituições (1899-1930).

PORTÃO, Ramão Gomes (1977), "Dossiê Amarelo", "Folha da Tarde(77/07/6,7,8,9,11)", São Paulo.

SAITO, Hiroshi (1961), Estudo do Mobilidade e Fixação no Brasil, São Paulo, Edit. Sociologia e Política.

_____ (1961), Integração e Participação do Japoneses e Descendentes na Sociedade Brasileira, São Paulo, Edit. Centro de Estudos Nipo-Brasileiros.

WHONG, Moon Kyoo (1983), The Korean Immigrants Churches in Brasil and Their Mission, Virginia, The Faculty of Union Theological Seminary.

* 이 글은 한국외국어 대학교 외국학 종합연구센터에서 발행하는 국제지역 연구 제4권 2호 (2000.08)에 발표된 글입니다.

해외 소수민족 및 이주 정책에 관한
Korean International Symposium 추진위원회

「재외동포 이주사 및 정책, 상반기 공개세미나」 2

-- 재외동포 이주사 및 각국 소수민족 정책을 중심으로 --

- 5월 25일(토) 오후4시, KIN 사무실
 - ◇ 미 국 - 조혜영(한국청소년개발원 책임연구원)
 - ◇ 브라질 - 최금좌(외국어대 포르투갈어과 강사)
- 6월 1일(토) 오후4시, KIN 사무실
 - ◇ 독 일 - 양영미(참여연대 국제연대 간사)
 - ◇ 중 국 - 이진영(경희대 교수)
- 6월 8일(토) 오후4시, KIN 사무실
 - ◇ 일 본 - 이준식(정신문화연구원 연구원)
 - ◇ C I S - 노영돈(인천대 교수)

때 : 2002년 6월 1일 토요일 오후 4시

곳 : KIN 사무실

KIN(지구촌동포청년연대)

재외동포 이주사 및 정책 - 독일

양 영 미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간사)

의제 1. 재외이주 당시 국내 및 이주국의 상황

1) 60년대 중반부터 형성되기 시작하여 현재 3 만 여 명을 헤아리는 재독동포¹⁾의 구성은 동포사회 구성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취업이주 노동자로 그 직업은 남자는 대다수가 광부, 여자는 간호사였고 소수의 태권도 사범, 한국요리사, 병아리 감별사 등이 있었다.

1963년 11월 23일 제 1진 247명을 필두로 광부들은 1980년 마지막 파독까지 총 7,936명이 외화를 벌기 위해 독일에 갔고, 간호사의 경우 역시 1진이 66년(?) 한복을 곱게 차려 입고 김포를 떠난 이래 10,032명이 독일의 병원에서 일했고 현재도 일하고 있다.

이들은 많은 수가 계약기간 종료 후 귀국을 했지만 남아 있는 사람들은 가족을 구성하며 현재 3만여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파독 광부의 70%는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의 루르(Ruhr) 석탄회사에서, 30%는 에쉬와일러(Eschweiler) 광산연합의 여러 광산들에서 일했고 간호사들은 독일의 전 지역 병원에 보내어졌다. 초청노동자(Gastarbeiter)라 명명되었던 이들은 한국뿐 아니라 터키, 유고, 이탈리아, 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의 다른 나라에서도 수입되어 왔으며 2차 대전 패전 후 노동력이 부족한 독일의 경제부흥에 커다란 몫을 담당했다.

2) 파독당시인 60년대 중반부터 70년대 중반까지의 한국상황은 박정희 대통령의 제 3공화국이 바야흐로 유신 독재체제로 넘어가는 정치상황에 60년대 초반부터 진행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극심한 이농현상과 “잘 살아보세”라는 구호가 남발되던 시절이었다. 굶지 않기 위해 피폐된 농촌을 떠나 도시산업전사로 편입이 되거나 광부로 파독되거나 베트남전쟁에 파견되어 생명을 담보로 이들은 외화를 벌었다.

963년 서독정부와 ‘한국광부의 직업기술연수’ 프로그램에 합의할 무렵 박정희 군사정권은 당시의 열악한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경공업위주의 수출지향정책을 전개하고 있었다. 노동집약적인 경공업정책은 저곡가로 인한 농업파탄이 부른 유희 농촌인력으로 광범위한 노동

1) 재독동포는 단기체류인 상사주재원과 유학생이 아닌 영주권내지 시민권자를 이른다.

시장을 형성했고 이로 인한 저임금이 한 축을 받쳐주었지만, 다른 축인 자본은 자체 해결이 불가능했다. 50년대 이후 쏟아 부어졌던 차관이 외채로 대체되면서 공업용 원자재, 기자재 수입을 위한 외환은 곧 고갈되어갔다. 농촌파탄에 따른 막대한 실업과 외환고갈의 악화에서 벗어나기 위해 박정희정권은 국내에 있는 넉넉한 자원 인력을 수출하여 외화를 벌기로 했던 것이다.

이들 파독 간호사와 광부들이 벌어들였던 외화는 당시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을 가졌다. (파독 간호사들의 매년 송금량이 5천만 USD)

다른 인력수출의 예로 64년-74년 사이 파월 장병으로 31만 2853명을 보내 65년-70년 사이에만 10억 USD를 벌어들여 이를 제 2차 경제개발계획의 자금으로 사용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있고, 70년 대 중반에는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국가들의 건설현장에 파견한 노동자들로 매년 30억 USD의 수입을 올렸던 적이 있다.

3) 한편 한국뿐만이 아니라 터키²⁾, 이탈리아 구 유고슬라비아 등에서 초청노동자를 수입했던 독일의 당시상황은 어땠는가?

2차 세계대전 이후 패전은 비단 독일에 경제적 파산만을 불렀던 것이 아니다. 시베리아원정에서의 참패 등은 일할만한 수 백만 젊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갔고 전후경제복구를 위해 독일은 외국에서 노동자를 “수입”해오기 시작했다. 이런 “초청노동자”들은 자체수급이 충족되는 80년대 경에 큰 흐름이 멈추었지만 이후 새로운 난민, 이주 노동자로서 여전히 독일은 이민국이 아닌 상태로 많은 이주 노동자를 가진 유럽의 나라가 되었다.

연도	전체 외국인 수	전 국민에 대한 비중 %
1960	686.2	1.2
1970	2976.5	4.9
1980	4,453	7.2
1990	5,342	8.4
1999	7,343	9.0

(단위 1,000명/ 출처 독일 연방 통계국)

한편 독일은 60년대 당시 산업의 발달로 석탄의 수요는 증가되었는데 기존의 광부들은 노령화되어가고 있었고 지하 1천 미터 이하의 위험한 일들을 젊은이들은 기피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독일정부는 ‘미개발국 기술개발지원’ 명분 하에 광부를 외국에서 수입해왔다. 이 ‘기술개발 지원’협약이 얼마나 허구였나 하는 사실은 75년 독일기술개발협회의 회의적인 자체 평가에도 잘 나타나 있다. 조사실례로 귀국광부 중 단 2명만이 한국광산에 취업해 있었다고 한다.

또한 초청노동자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처럼 모두가 기피하는 3D업종

2) 터키인은 독일내 외국인 중 가장 수가 많다. 2,053,564(1999.12.31) 명이고 총 734만명의 외국인 중 28%를 차지하고 있다.

에 한국의 광부나 터키 청소부 등이 취업하고 있었다.

당시는 사민당의 집권시기였고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보험, 병가나 휴가 등 복지혜택과 동일노동에는 동일임금 원칙이 적용되고 있었으나 내용을 들어가 보면 한국광부들의 계약은 별칭 59개월 계약으로 5년 이상 장기계약자에게 지급되는 사회연금지불을 피하기 위해 편법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나, 한국 광부 경력 불인정을 통해 호봉을 하향조정한 것 등 불이익과 차별이 있었다.

한국의 파독 광부들은 신체적 불리에도 불구하고 3년 계약 만료후 의무적 귀국조항을 포함, 한국 내 광부경력 불인정 등 다른 나라의 광원들에 비해 열악한 조건으로 파독되었다. 80년까지 계약이 갱신되어 남아있었던 사람들은 강제귀국이 아니라 본인의 선택에 따라 독일에 체류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법은 78년 6월 연방의회에서 통과되었는데도 한국광원들에게는 차별적으로 80년 11월부터 적용되었다. 광부들의 광산 기숙사 집단생활에 비해 간호사들의 경우는 지역과 병원 환경에 따라 다른 생활을 했다. 예외적으로 어학연수를 마친 뒤 병원에 투입되었던 베를린 외에는 모두 말 한마디 제대로 모르는 채로 지하로 병동으로 보내졌다. 이들이 후일담으로 풀어놓은 언어불소통의 난센스는 우스개도 있지만 이로 인한 안전사고도 야기되었을 정도로 심각한 것도 있었다.

의제 2. 재외 이주 후 정착과정 (재외동포의 역사)

1) 상술한 대로 초기정착기 재외동포들의 직업구성은 남자는 광부, 여자는 간호사로 단순했다. 잔류한 광부의 경우 90년대 말까지 광산에 남아있었던 2-3인을 제외하고는 이직을 해야 했다.

계약만료 후 강제 귀국조치를 하던 이전과 달리 1980년 한국의 광주민주화항쟁은 엉뚱한 선물을 광부들에게 가져다 주었다. 76년 이미 시작된 강제귀국조치에 항거해 간호사들이 거리에서 서명운동을 벌이며 강제귀국조치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벌여 100만인이 넘는 서명을 받는 개가를 올렸다. 한편 1980년까지 6천 여명의 광부들은 독일생활을 마치고 귀국할 때까지 이중, 삼중의 불이익을 감수했다. 그러나 79년 내재되어 있던 불만은 폭발되었다. 70년 대말 세계경제는 불황을 맞게 되었고 독일도 예외는 아니었다. 1백만 번째 외국인노동자에게 꽃다발을 걸어주던 독일도 경제악화와 실업증가로 더 이상 외국인노동자를 받아들일 수 없을 뿐 아니라 경제발전에 밀거름이 되었던 이들조차 부담스러운 존재로 변해버렸다. 대대적인 강제송환조치가 시작되었다.

이에 맞선 광부들은 1) 3년 계약한정 철폐, 2) 다른 유럽공동체국가 노동자들과 균등한 기회 보장, 3) 직업기술교육에서 동등한 기회 보장, 4) 사회적, 법적 동등한 지위보장이라는 요구사항을 내걸었다. 이러한 요구는 파독 간호사 역시 강제귀환조치에 항거하여 벌인 서명운

동과 맞물려 상당히 확대되어 나갔다. 기독교 기관 (CAJ 와 ESG)이 대외활동을 적극적으로 돕는 한편, 당시 800명 체류광부 중 400명이 여기에 호응했다. 파독프로그램 자체가 종료된 상태에서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이 요구들은 80년 한국의 정치상황과 맞물려 의외의 해결을 보게된다.

한국인 광부와 간호사들도 1978년부터 다른 외국인 노동자에게 적용되던 외국인법 시행령 (Verwaltungsvorschrift)에 따라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는 무기한 노동허가, 8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는 영주권이 부여되어 자유롭게 머물 수도 떠날 수도 있게 되었다.

2) 정착이후 광부들은 대체로 결혼과 함께 광산지대를 떠나 대도시로 이주해 갔다. 위 정착조치 이후 시행된 직업교육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기술(선반, 기계조립, 간호보조원 등)을 배워 전직을 했고 5,60세가 되어 은퇴할 무렵에는 한국식품, 식당, 여행사 등을 작게나마 도시별⁴⁾로 형성된 한인사회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분포도는 현재 독일에서 발간된 글뤽 아우프(Glueck Auf)라는 백서에 실렸다고 하나 아직 입수하지 못함)

광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력이 높고- 최소 간호전문, 간호대학 졸- 전문직종인 간호사의 경우 한국인보다는 독일인 지식층과 혼인하는 비율이 한국인끼리 가정을 이루는 경우보다 월등 수가 많았다. 이 들은 독일의 중류(산)층으로 편입되어 갔으며 빠른 정착, 안정기를 맞았다.

국졸, 중졸의 평균학력에 언어의 미숙함에 전직과정에서 대학 진학한 광부들은 소수였고, 대 다수가 대규모 공장의 노동자로 편입이 되었다 (오펠 자동차, MSN, 보쉬 공장 등)

하지만 사회민주당 정책은 독일내에서 한국인이 공장 노동자와 병원 의사라는 직종의 차이에 따라 수입의 차등은 있었지만 많은 사회복지와 의무교육 등 비교적 저 임금 직장인도 안정된 경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해 주었다. 대부분 부지런하고 근검 절약하는 한국인 간호사와 광부들은 많은 저축액과 모범적인 생활로 독일 사회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며 살고 있었다.

3) 그러나 통독 후 독일사회는 빠르게 변하고 있다.

이미 통독 이전부터 신자유주의의 물결은 미국보다 유럽에서 번지고 있었고, 통독을 이루었던 기민당의 콜 정권은 80년대부터 특히 한국여성이 아직도 많이 일하고 있는 병원(흔히 사회복지 시설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것이다. 예산 삭감은 교육부분과 의료, 양로원 등 노후 대책 부분에서부터 이루어 졌다.)은 80년대부터 건축, 감원의 돌풍이 불고 있었고 한국의 간호사들은 숙련이기에 고령이면서 호봉이 높은 인 명퇴 1순위 였다.

통독이후 구 동독 지역에서는 두 지역 사이의 차별로 신나치주의가 극성을 부리고 있었다. 동독 지역의 실업은 심각했고 특히 청년 실업의 문제는 자주 사회적 폭력과 범죄로 나타났

3) 직업교육 Umschulung 독일에서 보편화되어 있는 기술교육제도. 직종에 따라 6개월-3년까지 직업전환을 위한 교육이 정부 지원 아래 이루어 진다.

4) 프랑크푸르트 3,000 명, 베를린 4,000 명, 함부르크 3,000 명 하는 식으로 분산되어 있고 광산 밀집지역인 루르 지역에 아직도 많은 수가 살고 있다.

는데 당황한 독일 정부가 취한 방법은 외국인 몰아내기였다. 터키인이나 베트남인들이 동독 청년들의 일자리를 대체하고 있지 않은데도 외국인 법을 개악하여 외국인 거주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며 되도록 본국으로 송환되는 조치를 취하기 시작한 것이다.

외국인들이 독일 내에서 누리는 지위는 아래와 같다.

(이 아래 굵직한 글은 강정숙 < 독일의 이민자 동화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 에서 인용)

독일은 복지사회원칙에 따라 모든 국민이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민자들도 의료보험, 실업보험, 사회복지보조금(Sozialhilfe), 연금, 자녀들의 의무교육 등 사회복지의 기본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민자들 또한 사회의 복지 유지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즉, 독일 GNP의 약 10%는 외국인에 의해 창출되고, 독일 산업의 일정부분은 외국인 노동자에 의해 의존하고 있다.(음식업, 건설업, 병원, 양로원 등) 그러나 50년 가까운 이민생활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로 인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그들이 독일사회에 동화되어 동등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부분 이민자들은 단순노동자로서 낮은 교육수준을 갖고 있어 출발에서부터 한계를 갖고 있으며 고질적인 저 소득, 고 실업률(1998년: 19.8%, 독일 평균보다 약 2.5배가 높다), 자녀의 저능아 특수학교 고 취학률 등 많은 문제들을 겪고 있다. 위의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악순환은 계속되고 가난이 세습되고 있다. 특히, 이민가족의 청소년 문제는 아주 심각하다. 독일에서 태어났음에도 가정교육이 불충분하여 독일어 구사가 완전치 않고, 고등교육기관 및 대학진학률이 매우 낮다.

그리고 외국인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의 경우에는 학생들 간의 갈등이 많다. 교회나 사회 복지 기관에는 이민자들의 이러한 어려운 사회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특수한 사회서비스(Sozialdienst)가 있으며, 수많은 시민단체들도 정부(연방, 주, 시)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아 다양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예를 들면,

- 법률상담
- 강간, 고문을 받은 자들의 의료, 심리적 치료
- 국제 결혼, 가족 상담
- 지역사회에서 인종차별주의, 극우파 반대 홍보사업
- 독일, 이민 청소년들의 만남 주선(공동으로 스포츠, 음악, 서커스 연습 등)
- 이민자가족 보조정책(독일어 교육, 과외활동, 특수직업훈련 등)
- 타 문화에 대한 이해 도모: 예를 들면, 상호 문화간의 배움, 반인종차별주의 훈련 등
- 독일인과 외국인들간의 갈등 및 폭력을 방지하고, 평화적이며, 우애적인 관계를 이루도록 교육한다(중재(meditation) 등)

4) 독일 연방정부의 이민자 동화정책

1> 국적취득권 개혁

외국인이 독일사회에 동화하는 제일 빠른 지름길은 독일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다. 독일 국적을 받으면, 독일 시민으로 인정되어 법적으로 동등한 대우를 받기 때문이다. 사민, 녹색당 정부는 이에 대한 큰 개혁을 추진하였으나 야당의 맹렬한 반대에 부딪혀 결국 다음과 같은 두 합의안으로 타결되었다.

2000년 1월 1일부터 독일에서 태어나는 외국인 아동들은 부모중 한쪽이 적어도 8년 이상을 독일에 합법거주를 하였고 무기한 체류허가나 영주권을 소유하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독일인이 된다.

그런데 대부분 외국인 자녀들은 동시에 부모의 국적도 갖고 있다. 보수 야당은 '이중 국적 절대 반대' 캠페인을 열어 결국 다음과 같은 조건을 달게 되었다. 외국인 자녀들은 만 24세 전에 두 국적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 즉, 부모의 국적을 취득하면 독일 국적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리고 독일 국적을 선택하면, 다른 국적을 상실했다는 증거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부모의 외국 국적의 포기가 여러 가지 이유로 불가능한 경우는 다국적 취득이 가능하다. 단, 만 22세 전 까지 그에 상응하는 신청을 해야 한다.

독일에서 태어났으나 독일에서 성장하지 않은 외국인은 8년 동안 합법거주를 했으면 다음과 같은 조건 아래 독일국적 신청을 할 수 있다.

- 헌법 준수
- 지금까지 소유한 국적을 포기한 증거
- 충분한 독일어 구사
- 스스로 생활비를 조달할 수 있으며 실업자 연금이나 사회보조연금을 받지 않는다.
- 무범죄 경력

이로써, 혈통을 기본으로 했던(ius sanguis) 독일 국적법이 출생지역을 기본으로 하는(ius soli)법으로 바뀌었다. 몇 세대를 거쳐 외국인 취급을 받던 이민자들의 운명이 적어도 법적으로는 고쳐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새 연합정부가 계획했던 다국적 소유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곤(가령,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들) 불가능하게 되었다.

법 개혁 후에 독일 국적을 신청하는 외국인수는 점차 늘고 있으나 정보 부족과 고연령층의 원국적 포기에 대한 심리적 갈등 등으로 예상보다는 많지 않다.

2> 반차별대우법(Antidiskriminierungsgesetz) 제정

독일 국적을 취득해도 피부색과 문화가 다른 이민자들은 사회생활에서 많은 차별대우를 감수해야 한다. 가령, 택시운전기사로 일할 때, 식당이나 유흥장을 이용할 때, 주택을 구할 때, 은행이나 보험 거래시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 또한, 아프리카 출신의 유명한 축구선수도 축구장에서 인종차별적 야유를 받기도 한다.

인종차별주의에 의한 이런 무시 및 차별대우는 현존하는 공법으로 다루어 질 수 없기 때문에 새 연합정부는 연정계약에 다음과 같은 취지로 반차별대우법을 계획하고 있다.

'우리는 소수 그룹을 보호하고 그들을 사회에서 동등하게 인정받도록 할 것이다. 어느 누구도 신체장애, 출신민족, 피부색, 성취향(동성연애) 등으로 인해 무시를 받을 수 없다.' 반차별대우법은 이미 양당의 원내에서 토론되고 있으나, 아직 국회에 법안으로 제안되지 않고 있다.

3> 이민법 제정

독일은 컴퓨터 산업분야에 많은 전문가가 부족하여 2000년부터 외국에서 전문인들을 초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독일 내 이민자 수의 증가는 앞으로 불가피하다. 그 이유로는:

- 독일의 출생률은 전문가들의 예상에 따르면 2040년까지 계속 감소할 것이라 한다. 이에 따른 노동력 결핍은 외국인 노동력 수입으로도 충당하기 힘들 정도라 한다.
- 유럽공동체는 앞으로 10개의 동 유럽국가와 사이프러스를 유럽공동체에 받아 들이기로 했다. 이 국가들은 독일과 연계되어 있으며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으로 인해 독일로의 이주 가능성이 높다.
- 급속한 세계화에 따라 자본, 통화, 물자 시장이 국제적으로 열리게 되고 국가간의 경계를 넘어 정보 및 지식의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점점 커지는 국가간의 빈부 차이, 전쟁, 환경파괴에 따른 피난민의 증가로 (유엔통계에 따르면 전세계에 약 3천만 명이라고 한다) 세계적으로 이민자들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앞으로 닥칠 이민 상황에 대해 특히 녹색당은 과거 50년대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준비하여 대처하기 위해 이민법을 만들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 누구한테 무엇을 기준으로 이민허가를 줄 것인가, 그에 따른 이들 이민자들을 위한 독일사회에 동화정책, 즉 독일어 교육, 주택, 유치원, 학교 등 제반 문제 해결을 위한 준비사업이 중요한 현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기업들은 이에 동의하고 있으나 노조는 꺼려하고 있다.

4> 외국인법과 피난민(난민법)법 개정

외국인법과 피난민법에서 수많은 개혁, 수정할 부문 중 정부연정 계약에는 특히 다음의 두 가지 안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외국인들이 취업할 경우 노동허가를 얻기 위해 아주 복잡한 법적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일자리가 있어도(대부분 독일인이 원하지 않는) 노동허가가 없어서 취업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이민자들을 따라오는 가족이나 피난민들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 국가는 정책상 이 실업자들에게도 사회복지 보조금을 지원해야 하므로 국가나 당사자들에게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법 수정을 하고 있으나, 노동시장과 관련된 예민한 문제이므로 정부도 조심스럽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에 거주하는 피난민 중 많은 사람들이 독일에 이미 10년 이상을 거주하며 가족도 있고, 원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힘들 경우가 많다(베트남 난민들). 이들은 3~6개월마다 체

류 연장을 위해 심한 고통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생계수입이 있고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1년간의 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5> 외국인 동화정책을 위한 행정기관: 외국인 수입관(Ausländerbeauftragte), 다문화국

연방, 주정부 및 시의 행정부에는 외국인들의 동화정책을 위한 부처가 있으며, 이들의 주 업무는 이민자들과 관련된 제반문제에 대해 정책수립과 홍보활동이다. 이 부처는 다른 행정 부처와는 달리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고, 의회나 매스컴에서 정치적 발언을 하기도 한다.

3. 결론을 대신하여

우리가 재외동포이주사 및 정책세미나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은 각 지역 재외동포들의 역사들이다. 그러나 전혀 알 수 없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다. 같은 경우에 처해 보지 않고서도 생각해보라는 (역지사지 易地思之)라는 말은 있지만 알기는 어려운 것이다.

독일의 경우 재독동포의 삶은 젊은 시절 험한 고생에도 불구하고 정착국의 사회상황과 정책변화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노령화에 따라 재독동포사회 역시 그 명맥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재독 동포들은 현재도 지역별, 동기별 모임이나 각종 모임을 통한 친목도모 외에 연례 모임 등을 통해 동포사회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이들 재독동포의 자구적 노력이 한국의 정부나 한국의 각 사회 단위에 널리 알려져 국경을 달리해 살고 있지만 함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렇게 되기 위해 KIN이 이 세미나가 처음 세미나 기획의 의도대로 재외동포들의 지위에 대한 고찰이 차별과 인권침해 상황 개선을 위한 실천의 단초가 되기를 바랄 뿐이다.

5) 오월민중제 1980년 광주민주화 운동 이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치러진 대동제. 매년 5월 셋째 주 5·18을 즈음해 주말에 독일 전역에서 재독동포들이 모여 세미나와 문화제, 추모제를 치른다. 최근에는 빌레펠트(Bielefeld)에서 고정적으로 열리고 있다.

한인계 중국인의 이주과정과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

이진영 (경희대 국제관계-지역학부 교수)

왜 한인계 중국인인가?

민족과 국적이 모두 포함. 주재국에 대한 국민으로서의 충성과 한인계 동포로서의 개념이 모두 포함되며 현재의 상황을 중립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것임. 동포의 틀에 묶여, 혹은 충성의 범위를 과장해 기대하는 것은 무리. 운동의 출발은 현지의 한인계의 입장에서 그리고 개인의 차원에서 보아야 함.

의제 1. 한인계 중국인의 이주 역사와 현황

한인계 중국인 이주 역사는 가장 오래되고, 가장 대규모의 역사적 이동임

제 1차 이주에 이어 현재는 제 2차 이주라고 할 수 있음. 1차 이주의 성격 규명과 함께 2차 이주도 중요함. 1차 이주는 일제시대와 공산당 시대로 양분함. 3부분부터 공산당 시대임.

1) 재외이주 당시 국내 및 이주국의 상황

1> 한인계 중국인 이주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의 4가지임

첫째, 만주의 독특한 성격: 만주는 만주족등 한족 이외의 고향, 지리적 역사적으로 중국 본토와 분리, 청은 만주족이 세움, 중국은 일체성을 위해 동북이라 칭함

특히, 청은 한족의 이동을 막고자 봉금함, 1677년 25000제곱키로 그러나 팔기군으로

만주족은 관내로 이주, 만주는 인구가 회복해짐

둘째, 중국인의 동북 경략,

한나라때부터 간여하나, 명대에 이르러서야 료하 유역에 정착민 생김, 중국인 관념에서 만주는 관외의 땅, 관외는 성으로 불리지 않음, 중국은 후술할 역사 관계속에서 만주는 중화민족의 땅으로 강변함. 산둥 화북 이민 이주 시작, 1875 허 용 (러시아의 침략)

셋째, 한인계 국가의 만주,북방 경략,

고조선, 고구려, 부여, 발해 등/ 동호나 동이나의 논쟁/ 지방정권 논쟁
간도 영유권, 백두산 영유권, 만주고토 회복운동: 한국 민족주의의 원류
넷째, 만주의 최근세사와 외국의 개입

1875년 이후 만주는 제국주의 쟁탈장화: 1894-95 청일전쟁, 관동지방, 남만철도

1904-5 러일전쟁, 1911년 신해혁명후 봉천군벌지배, 1931년 만주사변 일본지배

즉, 만주는 귀속이 불분명하고, 최근 역사도 한족 입장에서 보면 이민족의 지배와 외세의 지배에 놓인 특수상황임. 만주는 한족이민자의 지역임(대만, 동남아 상황), 반면 한인계는 연관이 깊은 특수한 상황, 이민으로 인한 영토차지(러시아 원동) 논쟁

2> 왜 어떻게 언제 어디서, 어디로 떠나는가?

왜? 가난, 수탈, 차별, 제국주의 압박, 동원, 자원 등 시기따라 다름

초기의 경우(1860) 청-러 북경조약과 조선의 한발과 기근이 주 원인

중기(1910년경)의 경우 독립과 정치적 이유(토지조사사업)가 있음

그러나, 말기(1930년경)는 친일적 성격도 나타남

즉, 다른 질문은 시기별로 상이한 내용이며 곧 이주 역사임. 크게 3시기로 나눔

제 1기: 1700대-1910 조선시대

1700년대는 주로 계절적인 이민으로, 함경도와 평안북도 사람이 주이며

동변도 지역과 간도가 주 대상지임. 조선정부는 참형으로 다스리고, 청은 변발과 변복을 강요함. 영고탑(훈춘) 지역의 청 관현이 주 담당자이나, 소수의 이민이어서 크게 문제안됨

1860년 북경조약, 러시아와 조선 18km 국경 공유하면서 양 지역으로 이민 증가

1875년 이민허용이후 94년까지 이미 3만4천명으로 증가함. 특히, 간도는 러시아 포시에트 지역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실상 존재함. 간도지역 증가함, 일부 러시아 한인 동화 시작

조선의 정책은 대한제국 시기에 가까우면서 적극적인 정책화함, 관리파견, 청은 압박하고 국경수비 강화 노력함, 그러나 국제적 사정은 1910년까지 11만명으로 인구 증가

제 2기: 1910-1930 일제하 조선

1910년 합방과 이에 따른 토지조사 사업은 애국 지사와 유민의 만주행을 부름, 특히 삼남의 농민이 대거 이주함, 대략 경기도는 동변도 지역에, 경상, 전라는 간도지역으로 이주함, 그러나 기존 함경도인의 간도의 바깥쪽(해림, 영안, 하얼빈, 현 연변제의 길림성 지역) 이주가 두드러짐, 한반도 역 모형, 1920년에 30만 도달, 30년에 60만 도달, 간도지역인구에서 65% 차지함,

이 시기가 조선인에게 가장 힘든 기간임, 영사권의 충돌과 일제의 경찰파견, 국적논쟁, 토

비와 공산당의 대두, 빈농 고농으로의 조선인, 봉천군벌의 동화 및 말살 정책, 독립군과 독립운동 기지 및 한국 민족주의의 장소

제 3기: 1931-1945 만주국하의 조선인

개척단 및 모집에 의한 전 마을의 이주가 조직적으로 시작됨, 정착촌의 구조, 인구의 급속한 증가, 1936년까지 약 30만 증가, 주로 흑룡강 및 료녕성의 한족 지역으로 이주, 중국인과 한인계의 충돌 시작(만보산 사건, 민생단 사건, 친일단체 출현, 二兒鬼)

1937년 중일전쟁 이후는 전시기간임, 동원형태, 개척단 7만과 일제의 잔당 숙청

1945년 해방후, 210만의 조선인이 만주에 거주하고 있었음, 이 수는 국공내전 기간 감소함

2) 재외 이주 후 정착 과정

1> 생계수단

주로 농업으로 고농, 빈농, 임농, 소작농등이 전체의 95%이상 차지함.

개척과 수전 개발과 한계선의 상한선, 1920년대는 국적문제가 토지와 재산에서 중요한 권리 영역으로 존재함. 그러나 45년까지 유지됨

2> 인구 및 거주지역 변화

전술한대로 45년까지 큰 변화가 없는 패턴 유지, 현재도 일정 부분 비슷함.

그러나 변화의 주 요인은, 국공내전 참가 65000명, 항미원조 참가 30만명, 중국 정부의 안배에 의한 변화 3만여명 등이 1992년 이전까지 주요 인구 변동임.

3) 거주국내 동포들의 위치(정책, 사회의 역사, 정체성)

이러한 양상은 중공이 만주 및 중국 전역을 장악하면서 모두 변화하기 시작함. 즉, 사회적 지위 및 정부의 정책 그리고 민족적 정체성에서 큰 변화를 노출함.

이 부분은 지난 번 KIN에서 발표한 부분과 일부 중복됨(중복 부분 전제함)

중국의 조선족에 대한 정책은 크게 나누어 세 시기로 정리할 수 있다.

그것은 1) 중화민족의 일원으로서의 편입 (1945-1957), 2) 중화민족으로의 동화과정 (1957-1992), 3) 제 3 아이덴티티의 형성과정 (1992-)으로 설명할 수 있다. 1기와 3기는 조선족 문제가 단순한 국내문제가 아닌 국제문제의 시기이며, 그 파트너는 1기에서는 북한, 3기에서는 북한과 남한이다. 우리의 주 관심시기는 3기이나 이 시기에 나타나는 문제는 이미 나머지 두 시기에 배태되어 있는 것이다.

1> 중화민족의 일원으로서의 편입 (1945-1957)

이 시기는 조선족에 대한 개념 규정이 나타나는 시기이자 법률적으로 국적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는 시기이다.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의 국적 변동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그에 관한 법령이나 지침이 정해졌다면 그 내용은 무엇이고 적용 범위는 어느 정도인가 하는 점은 아직도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이런 혼란이 기본적으로 종식되는 것은 1957년임이 분명하다.

중국의 한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인 간도지역(현 연변)과 그 주변의 목단강 연선의 경우 이미 1946년 초에는 공산당이 실제적으로 장악한 지역이다. 공산당은 3차례에 걸친 토지개혁을 통해 이 지역의 행정권을 장악했고 그 결과 한인의 호구를 파악하고 있었다. 파악된 한인들 중 6만 5천명 정도의 장정이 중국의 국공내전에 동원되고 있다. 행정-징세-군 동원의 측면에서 본다면 이 시기의 중국 공산당은 연변에서 실제적인 정부 형태를 가지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영사문제도 북한의 인민위원회와 일부 협의한 흔적이 있다. 하지만 1948년 북한정권이 성립하고 1949년 중국이 성립하기까지 양측의 업무처리는 지침에 의존하되 많은 예외가 있었던 것 같다. 많은 한인들은 거의 자유롭게 양국을 왕래하였다. 물론 허가증이 필요하여 당국이 발행하기도 하였으나, 기본적으로 북한으로 돌아가는 데는 제약이 없었다. 1948년 12월에 열린 "조선민족문제에 대한 간담회"는 과도기적인 이 시기의 모습을 보여 준다. 소위 연안파라 할 수 있는 중국공산당 지도하의 주 덕해를 비롯한 미래의 조선족 지도자들은 민족구역자치내에서 중국소수민족으로의 조선족을 위치시키고, 당시 행정전원(총책임)이었던 임춘추를 비롯한 김일성 계열은 해방전의 약속대로 간도를 조선(북한)에 귀속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이러한 논쟁이 존재했다는 사실은 당시 중국 공산당의 승리가 확실시되는 시점에서, 조선족에 대한 문제를 확정하려는 공산당의 입장이 드러나는 것이지만, 동시에 여전히 혼란스런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예외적이라 할 수 있는 여러 조치들은 특수사항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일반적이었던 당시의 상황을 반영한다. 중국의 국공내전에 동원된 6만5천명의 조선족이 1949년 12월 어느날 갑자기 정주에 모여 북한으로 들어가 인민군 3개 사단으로 편제된 것이나, 한국전쟁 기간과 그 후에 북한의 복구사업에 많은 조선족이 참여한 사실 등은 그 당시의 특수사항을 반영한다. 문제는 이들 중 많은 이들이 북한에 잔류하여 북한 정부나 당에서 일하였고, 또한 일부는 원하면 다시 중국으로 돌아갔고 중국 정부도 이를 용인했다는 것이다. 사실상의 이중국적의 상황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사회주의적 형제애라고 하기에는 특수한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957년 중국정부가 지역적 개념을 사용하여, 산해관 이북의 한인을 조선족으로, 산해관 이남의 한인과 이후 중국에 들어온자를 조교(조선교포)로 분류하기까지 특수한 상황은 유지된 것이다.

이에 반해, 중화민족 개념에 의한 조선족으로의 논리적 작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 역설적이게도, 소위 중국의 토착민족이 아닌 한인을 중화민족의 일원으로 개념화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민족이론이 발전하였고 민족정책의 시행에 있어서 모델이 되었다는 것이다. 비록 전국적 범위에서 형성된 개념과 정책이 조선족 지역에서 시행되는데는 위의 경우에서 보듯이 특수한 사정이 고려되었으나, 조선족 정책이 중국 민족정책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는 것은 하나의 아이러니라 할 수 있다. 45-49년 사이의 공산당의 선언과 문건에는 중국의 한인을 표현하는 여러 용어가 혼재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는 최종적으로 조선족으로 정리되는 것이다.

민족구역 자치에 의한 연변조선족자치주의 탄생도 이와 행적을 같이 한다. 물론, 내몽고가 형식적으로 먼저 자치구가 되었으나 연변이 자치구 설정이 늦어진 것은 순전히 한국전쟁의 영향이다. 1952년 성립한 자치구(주)는 중국의 통일적인 입장이 강조된 것으로 역사적인 간도의 영토 할양 요구에 대한 해결로써 성격도 가지고 있는 것이다.

2> 중화민족으로의 등화과정 (1957-1978)

영토와 정치적 형태에 대한 문제가 일단락 되자 중국 정부가 취한 행동은 중화민족주의에서 중요한 국민적 통합과정의 실천이었다. 1957년 이후 즉, 1954년 중국의 헌법이 반포되고 짧은 2년간의 황금기가 지난 후, 중국은 정치적 동원이 특징인 시기로 접어들게 된다. 이 시기 조선족 정책에서 중요한 것은 이런 정치적 동원을 통해서 중국의 한인이 실제로 중화민족의 일원인 조선족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이다. 북한과의 관계는 중소분쟁의 여파나 북한의 8월 종파사건의 영향과 중국내의 반우파 투쟁으로 인하여 이제는 하나의 외국으로 북한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내의 한인은 북한과 구별되는 중국인으로 자신을 규정하는 것을 강요받게 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반우파 투쟁과 지방민족주의(조선족의 민족주의) 투쟁에서 나타난 다중 조국관은 이런 고민을 잘 나타내고 있다. 다중 조국관이란 중국내의 한인에게 여러 조국 혹은 모국이 있다는 것으로, 사회주의모국인 소련과, 이민자로써의 모국인 고국(故國) 한반도와 지금의 조국 중국이 있다는 것이다. 물론,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모국은 포기하도록 강요받았다. 심지어는 고국이라는 표현도 쓰지 못하게 하였다. 이런 현상은 문화혁명(1966-76)의 초기에 더욱 심하였는데, 일체의 민족적 특색이 나타나는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특히, 계급대오 정리운동기간(1968-9)에는 많은 조선족들이 이러한 민족문제로 인하여 희생되게 된다.

정치적인 민족주의가 봉쇄된 시점에서 문화적 민족주의도 제약을 받았다. 민족학교의 구성이나 수업내용, 교과과정 등에 대해서도 제약이 나타났고 이러한 소위 정치화할 소지가 큰 문화적 요소에 대한 통제는 민족언어순결론 논쟁에서 나타나고 있다. 민족언어 순결론 논쟁은 중국어의 어휘와 구조가 조선어에 침투하는 상황에서 민족어를 지키려는 노력에서 시작되었으나, 반우파 투쟁 등을 거치면서 정치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많은 참여자들이 숙청되는 계기가 된다. 즉, 조선족은 이제 중화민족의 일원으로 정치-행정-사회-문화적으로 존재할 것을 강요받은 것이며, 이러한 실제적 강요는 30여년간 지속되면서 중국의 한인을 한반도의 한인과 많이 구별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3> 제 3 아이덴티티의 형성과정 (1992-)

우리의 주된 관심은 1992년 한-중 수교후 전개된 조선족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를 독립적

인 장으로 나누어 이슈별로 살펴보기 전에 여기서는 기본적인 내용을 소개한다.

한중수교는 중국의 조선족 정책에서 일대 전기를 맞이하는 사건이다. 한 국가의 내국화한 조선족 정책이 다시 외교 및 영사문제로 등장하게 되었고, 이는 중국의 민족정책에서 실제적으로 도전적 요소가 된 것이다. 특히, 북한과 연결된 한반도에서의 두 개의 국가의 인정은 중국이 조선족 문제를 자국내의 문제뿐 아니라 대 한반도 정책의 맥락에서 검토하게 된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조선족 문제가 중국의 국내 민족문제와 국외 외교문제와 중첩되게 되었다는 것으로 다시 한번 조선족 문제의 독특함이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의 소수민족중 어느 정도 정치적, 경제적으로 강성한 모국을 가진 민족은 조선족을 제외하고는 없는 실정이다. 또한, 티베트의 경우와는 달리 조선족은 이동이 상대적으로 많은 민족이고, 두 개의 모국과 연결되어 있고, 원래 토착 민족이 아닌 점도 조선족 문제의 특이한 점을 나타낸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반응 중, 특이하게 조선족만을 지칭하여 발표된 것은 없다. 여전히, 전체 중국의 민족 정책의 큰 테두리에서 언급되고 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조선족 문제를 특수화하는 것보다는 자국의 일반적인 민족정책의 테두리에 유지함으로써 여전히 중화민족주의적인 민족통합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물론, 중국은 티베트, 위구르, 몽고, 조선족을 1994년 조국의 안정을 위협할 수 있는 불온한 민족으로 지정하였다. 사실 중국의 민족정책은 이들과 무슬림인 회족에 대한 정책이 그 근간을 이루고 있다. 나머지 소수민족은 숫자도 적고, 많더라도 중국에 거의 동화되거나 정치적인 민족주의를 분출시키는 민족들이 아니다. 또한 지역적 분포에서도 광범위하지가 않다. 오로지 위의 5개 소수민족만이 잠재적인 정치적 도전 세력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회족은 회교도화한 한국이므로 민족문제라기 보다는 종교문제의 색채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4개 민족을 불온하다고 한 것은 소수민족 전체를 불온시 한 것으로 특이한 것은 아니다. 문제는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하거나 실제적인 조직을 가지고 움직이며 테러등의 활동을 하는 다른 민족과는 달리 조선족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중국 정부가 조선족 문제를 단순한 국내의 문제로 보지 않고 있음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다.

지난 10여년간 중국의 조선족은 한국을 방문하거나 중국을 방문한 한국인들과 교류하면서 여러 이슈에서 입장을 달리하였다. 단순하게 정리할 수 없는 이런 과정을 통하여 현재의 조선족은 한반도의 한국인과 북한인과는 구별되는 제 3의 아이덴티티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조선족의 주변부적 위치가 1기에서는 주로 북한의 중심성과 중국의 중심성이 교차하는데 있었고, 2기에서는 중국의 중심성에 흡수되도록 요구되었다면, 지금은 중국의 중심성의 기반하에 자신들의 상대적 중심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으로 보여진다. 여기에서, 조선족에 대한 중심성을 제공하고 그 편으로 이끌려는 노력은 사실상 중국의 중화민족주의와 한국민족주의가 충돌하고 경쟁하는 성격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물론, 조선족은 여기에서 새로운 제 3의 아이덴티티를 추구하는 듯이 보인다. 한국 정부와 국민이 어떤 정책을 취하는 가는 이러한 현실에 대한 판단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즉, 어느 측면에서 문제를 바라보는가 하는 시각에 따라 정책적인 차이뿐 아니라 중국내의 조선족의 아이덴티티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4) 거주국내 동포들의 현 위치

1) 경제-사회적 지위

직업적인 면에서 여전히 농민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중국 농촌 사회의 해체와 한국 바람 속에서 급격하게 직업이 바뀌고 있는 중이다. 현재 주요 종사 직업은 지식계급의 경우, 통역이나 상사주재원 및 대리직원 등의 한국 기업 관련 직종의 증가와 함께 전통적인 중국 정부의 공무원이나 기타 중국 사회의 연구소와 대학에 근무하는 자로 나눌 수 있다. 노동 및 농민 계급의 경우, 한국 기업 주변에서 종사하는 찬모, 육아담당, 공장근로자, 선원, 운전사 등의 직종과 한국에 진출하여 종사하는 직업 종사자 약 20만이 있다. 특히, 요식업 및 카라오케등 유흥업 진출이 두드러지며, 북경의 경우 가라오케는 대략 40%가 조선족이 운영한다. 그 결과 여급, 기도, 종업원 등과 함께 요리사, 보조원 등이 있다.

창업도 활발하나 재벌에 속하는 기업집단을 이룬 경우는 아직 없다. 그 이유는 조선족 사회의 개방이 상대적으로 늦게 시작하였고, 조선족의 관념에서 상업을 중시하지 않은 이유도 있다. 현재 쇠퇴하는 직업은 교사와 출판 등 지식계급 직종이다.

2) 다른 소수민족과의 관계

공식적인 관계를 제외하고 다른 소수민족과의 관계는 희박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중국의 상황에서 나오는 특수성이며, 특히 지역적으로 조선족 거주지가 다른 소수민족이 희박한 지역이기때문이기도 하다. 공식적으로는 정협, 국가민위, 민족대학 등을 통한 관계가 있으나 특별하게 친밀한 민족은 없다.

3) 공동체 결성 상황

중국에서 자발적인 공동체의 결성은 사실상 금지되어 있다. 연변의 경우 원래 있는 단체가 유지되는경우가 있으나, 기타 지역의 경우 민족단체의 새로운 결성은 힘들다. 예로 2만이 새롭게 거주하는 상하이의 경우 조선족 학생들이 비공식적 단체를 꾸리고 있으나 체육대회 등의 행사는 철저히 봉쇄당하고 있다.

의제 2.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

1) 소수민족 현황과 법령

1) 현황

현재 55개 소수민족이 있으며, 전국토의 60% 지역을 역사적으로 차지하고, 9천만 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있고, 이는 중국 전체 인구에서 8%정도를 차지한다(1990년 통계). 그러나, 규모를 가진 소수민족은 몇 안되며 이들 중 정치적으로 혹은 역사적으로 뚜렷한 민족적 특색을 보인 민족은 더 적다. 예로, 가장 인구가 많다는 1550만 장족의 경우 광서에 자치구가 있으나 거의 한족에 순치 동화되어 한 지방과 같은 양상이다. 이는 980만 만족(만주족)의 경우도 동일하며 현재 만족 언어나 문화(정의에 따라 다르나)를 유지하는 만족은 2000이 안된다고 한다. 회족의 경우는 한족이나 종교가 이슬람인 사람들로 독특한데 860만이다. 이하, 10위 이내의 인구인 민족중 묘족(740만), 이족(660만), 토가족(570만), 부의족(255만)은 지역에 따라 동화정도가 차이하는데, 자신들 상호간의 분열 양상까지 감안한다면 큰 문제가 안된다.

문제가 되는 민족은 위구르(720만), 몽골(480만), 티벳(460만) 정도라 할 수 있다. 이 중 몽골은 몽골인민공화국과의 문제가 있으나 이미 내몽골의 한화가 인구적으로 많이 진행되었고(80% 이상), 산거가 진행되어 중심력이 약해진 상태이다. 티벳의 경우 한족이주와 티벳인의 인도 이주 그리고 서구의 관심이 있는 경우로 여전히 중심성이 있다.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민족은 위구르족으로 알려져 있고 9-11이후 집중적인 탄압의 대상이 되고 있다. 즉, 위구르족, 회족, 티벳족의 경우(약 2000만)가 현재적 문제이며, 조선족과 몽골족은 잠재적 문제가 있는 정도라 할 수 있다.

2) 관련법령

중국 소수민족정책의 기본은 민족구역자치법이다. 중국은 구역자치라는 것을 그 기본으로 삼고 있는데, 이는 통일적인 국가 아래서의 구역자치의 개념으로, 소련과는 달리 분리독립이 허용되지 않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구역자치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민족공작으로 알려진 사실상의 정책의 지침과 구체적인 민족에 대한 실행정책이 모두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는 점이다. 법이 하나의 규정이라면 이는 많은 경우 큰 틀만 언급할뿐 실제적인 원칙은 민족공작에 근거하였으며, 이 공작은 지역 및 민족에 따라 변용 가능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운남성의 작은 소수민족에게 행한 구체적인 정책이 관용적이라 하여 이것이 동일하게 위구르족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닌 것이다. 현재 이런 민족공작적 측면에서 언급되는 내용은 크게 중화민족 개념과 구체적인 실천지침이라 할 수 있다.

중국 정부의 조선족 정책을 보는데 있어 제일 중요한 요소는 중국 공산당이 새롭게 규정한 중화민족의 개념이다. "중화민족은 한족(漢族)을 주체로 하고 55개 소수민족을 포괄하는 56개 민족으로 구성"된 민족이다. 학문적으로, 근대 서구 국민국가 형성에 있어서 민족주의는 주요한 역할을 하였고, 그러한 민족주의를 통해 형성된 국민의 통합이 국민국가의 기초가 되고 있다. 중화민족은 이러한 국민국가 형성과정에서 새롭게 창조된 개념이다. 이것은 흡사 British가 English를 중심으로 Welsh, Scottish, Irish 일부가 포함된 것과 유사하다. 우리가 영국인이라고 알고 있는 것은 British이다.

중국에서는 이러한 관념을 독특하게 구체화하여 그것을 계서적 개념으로 만들었다. 즉, 중화민족에 해당하는 것을 ren(人)으로, 중화민족의 구성요소는 zu(族)으로 개념화 한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인은 족의 상위 개념이다. 즉,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인은 이제 한족이라 불린다. 중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이제 더 이상 조선인도 한국인도 아니다. 그들은

중화민족의 일원인 것이다. 영어로 번역도 Chinese nation(중국인, 중화민족), Han nationality(漢族)으로 달리하고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이러한 '인'의 개념이 단순히 국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것은 민족의 개념을 포괄하는 것이다. 즉, 일반 민족을 넘어서는 상위 민족 개념에 중화민족이 있는 것이다. 독특하다고도 할 수 있고, 자기 중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관념이 우리의 '동포'라는 개념과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 중국측이 재외동포 특별법에 대해 "재외동포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였다고 항의한다면, 중국 역시 중화민족의 범위를 그것보다 더 넓게 규정하고 있는 셈이다. 즉, 중국은 민족의 개념을 국적 개념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많은 조선족은 자신을 중국인 혹은 중화민족이라 한다. 그리고, 조선족이라 한다. 이것은 49년이래 78년 개혁 개방전까지 30여년간 고립된 채로 진행된 중국의 민족정책의 현실인 것이다. 모든 것은 이러한 민족과 국적이 혼재되고 새롭게 규정된 중화민족의 개념에서 출발한다. 티벳 문제의 근원도 여기에서 출발한다. 조선족 문제도 예외가 아니다.

중국의 독특한 민족관념과 함께 그것의 구체적 실천인 민족 정책은 이 관념을 현실로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였다. 중국의 민족 정책, 특히 소수민족과 관련하여 주요하게 나타난 표현은 1) 다원일체(多元一體), 2) 단기적 공존 장기적 융합, 3) 큰 것은 틀어쥐고 작은 것은 놓는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러한 방침은 중화민족주의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다원일체란 중국은 다민족 사회이고, 다양한 인종적 배경과 지역적 특색이 있으며, 공산화 이전에는 그 정치-사회-경제적 다양성이 존재하였는데, 이러한 다원성을 일부 인정하는 토대에서 일체화한다는 의미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다원을 어디까지 인정하는가 하는 점이다.

단기적 공존 장기적 융합이란 말 그대로, 한족과 소수민족이 공존하는 현실에서 단기적으로는 공존하나 장기적 목표는 중화민족으로의 융합이라는 것이다. 중국에서 동화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거기에는 주종관계(주류사회에의 동화)가 있다는 것이다. 융합은 상호작용으로, 한족도 소수민족의 관습 등에 동화될 수 있다는 논리에서 출발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물론 어려운 얘기이다. 중국은 이러한 관념에 근거하여 역사도 재해석(왜곡)하고 있다. 민족관계사의 영역으로 분류되는 연구에서 이제 더 이상 이민족이 증원을 침략하였다는 표현은 쓰지 않는다. 중화민족의 일원인 하나의 민족과 다른 민족과의 내전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또한, 이민족의 왕조는 중국의 역사적인 지방정권으로 불려지고 있다. 발해와 고구려가 그 예이다. 단기적으로, 역사적으로 존재했는지라도, 그 구성원인 민족은 이제 중화민족으로 융합되거나, 그 일원으로 남아있으므로 그들의 정권은 중국의 지방 정권이라는 것이다.

큰 것은 틀어쥐고 작은 것은 놓는다는 방침은 우리가 중국 소수민족 정책의 관용성을 종종 발견하여 착각하는 부분이다. 즉, 작은 것은 놓는 다는데서 관용성의 여지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무엇이 큰 것이고 무엇이 작은 것인가 하는 점이 논쟁거리라 할 수 있다.

위의 3가지 요소는 중화민족주의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다. 중화민족주의란 중국이 서구와 일본의 침탈 그리고 전근대적 요소와의 투쟁을 통해 형성된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중화민족주의의 요소 중 "영토적 일체성과 국민적 통합"이 가장 주요하게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다. 영토적 일체성이란 중국정부가 영토문제에 대해서 단호하다는 의미이다. 우리는

홍콩이나 대만문제에 집착하는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 이를 알 수 있다. 또한, "티벳은 분리될 수 없는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표현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국민적 통합은 민족정책과 관련하여 더욱 중요한 요소이다. 위에서 설명한대로 사실상의 "주체민족인 한족으로의 동화"가 목표인 셈이며, 이는 기본적으로는 장기간의 과제이나, 정책의 측면에서는 부침을 겪으면서 실현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은 행정제도, 교육, 언어에서의 정책에서 나타난다.

큰 것은 틀어쥐고 작은 것은 놓는다는 것과 연관된 것은 소수민족의 정치적 민족주의와 문화적 민족주의를 구별하여 대처한다는 것이다. 즉, 위에서 정한 가이드라인이라 할 수 있는 일체적 요소는 소수민족이 침범할 수 없는 요소이다. 다원적인 것은 문화적인 면에서만 허용된다. 중국정부의 영토나 민족관념은 불가침이나, 언어나 풍습 등은 보호되고 때로는 장려된다. 우리는 연변에서 한국어가 쓰여진 간판을 보고 중국의 민족 정책을 본다. 그러나 이러한 언어문제도 단순히 문화적인 요소가 아닌 정치화 할 경우 중국 정부는 단호하게 대처하였다. 1957년의 민족어 순결논쟁과 이후 연결된 반우파 투쟁은 좋은 예이다. 또한, 중국의 민족 정책은 '구역자치' 라는 개념에서 출발하고 있다. 구역자치란 소수민족의 다원성을 인정하면서도 중국의 일체성을 놓치지 않으려는 정책이다. 구 소련이 민족공화국 정책을 사용하여 후에 분열하는데 빌미가 되었다면, 구역자치제는 소련보다 더욱 통제된 그리고 분리될 수 없는 행정개념이다. 이것은, 형식적인 자치이며, 주로 문화적 영역에서의 자치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민족구역 자치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자치구역(자치구, 자치주, 자치현)의 확정과 민족간부의 충원, 민족어의 사용과 공용문서화, 민족교육의 허용등은 시기에 따라 부침을 겪었던 것이다. 마오쩌둥 시기에 이런 법제화는 초기에 충실하게 지켜지나 57년 이후 흔들리고, 문화혁명을 거치면서 사실상 무너지게 된다. 덩샤오핑 시기 역시 초기에 복권적 의미에서 강조되나 1984년 이후 사실상 민족구역 자치법은 그 의미가 퇴색하고 민족공작만이 남게 되는 것이다.

2) 차별과 우대 조치

차별은 주체민족인 한족에의 사실상 동화가 목적인 상황에서 나타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개방후 강조되는 경쟁에서 최소한도의 특혜마저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소수민족에 대한 차별은 제도외적인 면에서 더욱 심해진 것이 사실이다. 즉, 당이나 정부의 승진에서 나타나는 소수민족의 비율의 저하, 지역 및 교육적 특색에서 나타나는 빈곤의 악순환 상황, 전술한 정치적인 제약에 따른 일부 적극적인 소수민족의 사실상의 진출 봉쇄(조선족 해당)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대조치로 남아있는 것은 일부 대학입시에서의 민족어 사용과 같은 우대와, 인구계획에서 일부 우대, 언어 사용에 있어서의 자유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시장 논리하에서 이는 급속하게 쇠퇴하고 있다.

3) 외국인의 국적 취득 조건과 절차

발표시 정리하여 제공할 예정입니다.

<참고문헌>

- 이진영, "중국 소수민족 정책의 이론적 기초에 관한 연구" 아태연구(경희대), 제6권 2호 (1999.12)
이진영, "동아시아에 있어서 한인계 이민자에 대한 연구: 쟁점과 전망" 재외한인연구, 제 10 호, (2001.12) (파일첨부)
정판룡, 내가 살아온 중화인민공화국 (서울:웅진출판사, 1994)

해외 소수민족 및 이주 정책에 관한
Korean International Symposium 추진위원회

「재외동포 이주사 및 정책, 상반기 공개세미나」 3

-- 재외동포 이주사 및 각국 소수민족 정책을 중심으로 --

- 5월 25일(토) 오후4시, KIN 사무실
 - ◇ 미 국 - 조혜영(한국청소년개발원 책임연구원)
 - ◇ 브라질 - 최금좌(외국어대 포르투갈어과 강사)

- 6월 1일(토) 오후4시, KIN 사무실
 - ◇ 독 일 - 양영미(참여연대 국제연대 간사)
 - ◇ 중 국 - 이진영(경희대 교수)

- 6월 8일(토) 오후4시, KIN 사무실
 - ◇ 일 본 - 이준식(정신문화연구원 연구원)
 - ◇ C I S - 노영돈(인천대 교수)

때 : 2002년 6월 8일 토요일 오후 4시

곳 : KIN 사무실

KIN(지구촌동포청년연대)

‘단일 민족’ 속의 이민족 : ‘재일 조선인’¹⁾의 과거와 현재

이 준 식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연구원)

1. 시작하며

재외 동포는 20세기 한국 사회의 민족 문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한국 역사에서 대규모의 해외 이주가 본격화된 것은 우리 스스로의 힘에 의한 근대 사회로의 이행이 좌절된 이후 곧 일제 강점기부터였다. 물론 그 이전에도 중국이나 노령으로의 이주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중국의 경우 이미 명말청초(明末清初)에 집단적으로 이주한 흔적도 있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 이전의 해외 이주는 소규모의 분산적인 것이었다. 따라서 자주적인 민족 국가 수립의 실패와 국망(國亡)이라는 상황이 재외 동포 사회 형성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37년 무렵까지의 해외 이주민은 주로 일제의 억압과 수탈 때문에 몰락한 뒤 마지막 살 길을 찾아 만주와 일본으로 건너가는 길을 밟았다. 이어 전시 동원 체제로 접어든 1930년대 후반부터는 일제의 강제 동원 때문에 해외로 유출되는 인구가 급증했다. 1930년대 말부터 1945년 사이에 강제 동원되어 일본과 일본의 점령지로 유출된 인구는 최소한 2백 만 명을 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불과 5·6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전체 인구의 1할에 가까운 대규모의 인구가 해외로 유출된 것이다.

그리하여 1945년 무렵에는 일본에 210만 명, 중국에 160만 명 등 모두 400만 명이 고국을 떠나 살고 있었다. 해방 이후 이들 가운데 일부는 귀국했지만 이미 고국에서의 생활 기반을 잃은 상당수는 현지에 남는 길을 택했다. 중국, 소련, 일본에 잔류한 동포는 민족적 비극의 최대 피해자였다. 이들의 비극은 해방 이후에도 세계적 수준에서 냉전 체제가 형성되고 한반도에서는 남북 분단이 고착됨에 따라 반세기 이상 지속되어 왔다.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서 잊혀진 존재였던 이들 재외 동포 문제를 빼고서는 민족 문제의 해결을 생각할 수 없는

1) 재일 동포는 2차 대전이 끝난 직후만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일본 국적’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1947년의 외국인 등록령과 1952년의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 따라 재일 동포의 일본 국적을 박탈하자 많은 재일 동포가 애초에는 남·북 한 가운데 어느 한 쪽이 아니라 조선 ‘민족’의 일원이라는 의미에서 국적을 ‘조선’으로 택했으며 그 결과 ‘재일 조선인’이라는 호칭이 널리 쓰였다. 그러나 1965년 이후 일본 정부가 한일 조약에 입각해 재일 조선인 가운데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에게만 협정 영주권을 부여하자 많은 재일 조선인이 ‘조선 국적’을 ‘한국 국적’으로 바꾸었다. 재일 동포를 어떻게 부를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자에 따라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고 있지만 여기서는 현재 재일 동포의 역사적 기원과 관련해 ‘재일 조선인’으로 부를 것이다.

이유도 여기에 있다.

2. 일본과 ‘단일 민족 신화’

1990년대에 들어 일본 사회에서는 외국인이 인구의 1%를 넘는 시대에 들어섰다는 이야기가 흥미한 적이 있다. 그런데 언론을 통해 널리 유포된 ‘외국인 1% 담론’에는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 간과되고 있다. 그것은 이미 반세기 이전에 일본 전체 인구 가운데 조선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1%를 넘어선 적이 있었고 이들이 일본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저변에서 지탱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도 그랬지만 현재에도 많은 일본인은 일본이 단일 민족으로 이루어진 사회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러한 생각을 흔히 ‘단일 민족 신화’라고 한다.

일본인들이 말하는 ‘단일 민족 신화’란 “단일 순수의 기원을 갖고 공통의 문화와 혈통을 지닌 일본 민족만으로 일본이 구성되었고 현재도 구성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가리킨다. ‘만세일계(萬世一系)의 천황제’와 표리를 이루는 이러한 단일 민족 신화는 메이지(明治)유신 이후 일본의 근대 국가가 수립되는 과정에서 ‘국민’을 창출하는 데 이념적인 뒷받침이 되었다. 그리고 일본 제국주의가 순수한 일본 민족만으로 구성된 내지와 비일본 민족으로 구성된 대만, 조선(오키나와, 홋카이도) 등의 외지 곧 청일전쟁, 노일전쟁,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등 일련의 침략 전쟁을 통해 획득한 식민지를 구분하는 준거가 되기도 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오늘날 일본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아시아계 외국인에 대한 차별의 배후에도 여전히 ‘단일 민족 신화’가 작용하고 있다.

일본인 대다수는 일본은 일본인 내지는 ‘야마토(大和) 민족’이라고 불리는 민족으로 성립된 단일 민족 사회라고 믿어 왔고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다. 2000년 4월 도쿄도지사인 이시하라(石原慎太郎)의 ‘삼국인’ 발언 사건 및 이에 대한 일본인의 반응은 다수의 일본인들이 아직도 단일 민족 신화에 사로잡혀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여기서 ‘삼국인’이란 2차 대전이 끝난 후 일본에 잔류하던 일본 구식민지 출신 곧 재일 조선인과 재일 대만인을 가리키는 차별적이고 역사적인 용어이다. 그런데 이시하라를 비롯한 일본의 정치인들은 ‘삼국인’이라는 용어를 외국인이 일본 인구의 1%를 넘게 된 현재의 일본 상황과 연결시켜 재일 조선인 등 아시아계 외국인에 대한 대중의 불신과 공포를 부채질하는 데 이용하려 했다. 실제로 ‘삼국인’ 발언에는 외국인이 ‘안전 국가’인 일본의 안전을 위협하는 흉악 범죄의 온상이며 따라서 ‘우리’ 일본인과 외국인은 적대 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이시하라의 주장에 대해 매스미디어에 드러난 반응의 8할이 이시하라를 옹호했다는 사실은 일본 사회에 어느 정도 ‘단일 민족 신화’가 뿌리깊게 자리를 잡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일본 특유의 ‘단일 민족 신화’가 처음으로 구체화된 것은 1890년대 말의 내지 잡거(内地雜居) 논쟁이었다. 1899년 메이지 정부가 서구 열강의 압력에 밀려 내지

잡거를 허용하기 전까지만 해도 일본에서는 외국인과 일본인이 한 곳에 같이 어울려 사는 것이 금지되고 있었다. 같은 해 일본 정부는 '북해도구토인(舊土人)보호법'을 공포해 북해도의 선주 민족인 아이누족에 대한 격리와 적극적인 동화 정책 곧 일본화 정책을 시작했고, 부계혈통주의에 입각한 '국적법'을 공포해 순수한 일본인과 귀화한 일본인을 명백하게 구분하고 후자의 권리를 제한했다. 일본은 식민지 대만과 조선에 대해서도 동화 정책을 표방하며 형식상으로는 대만인과 조선인을 외국인이 아닌 황민 내지는 대일본제국의 신민으로 규정하면서도 실제로는 '외지인'으로 취급했다. 일제 강점기 조선인에게 부여된 일본 국적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일본인에게 적용되는 국적법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었다. 이를테면 국적과 호적은 불가분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조선민사령'을 따로 제정하고 이에 근거한 조선 호적을 별도로 만들어 이것을 조선인에게 적용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를 통해 일본은 이질적인 민족적 요소를 '단일 민족 사회'의 경계 밖에 존재하는 예외적인 요소로 치부하고 있었던 것이다.

'단일 민족'으로 구성되었다고 믿어지는 한 국가가 역시 '단일 민족'으로 구성되었다고 믿어지는 다른 국가를 식민지로 지배하게 될 때 거기에는 당연히 민족 차별의 논리가 횡행하게 된다. 왜냐하면 '단일 민족 국가'는 다른 민족, 인종과의 공존이라는 역사적 경험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인이 갖고 있는 '억압 이양의 원리'(丸山眞男)라는 독특한 정신 구조는 식민지 지배를 받는 이민족에 대한 배타적 태도, 멸시 의식을 더욱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여기서 '억압 이양의 원리'란 일상 생활에서 상위자로부터의 억압이 하위자에게 차례로 옮겨짐으로써 전체적인 균형이 유지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설명에 따르면 사회의 서열 체계에서 최하위에 놓인 하층 민중의 경우 지배 계급의 억압에 대한 탈출구로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는(또는 받은 바 있는) 이민족에 대해 광적인 배외주의에 사로잡히게 된다. 그리하여 일본 민족 전체가 상하의 구분 없이 민족 차별과 억압을 정당화하는 독특한 의식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일제의 식민지 지배하에서 일제가 우리 민족에게 행한 극심한 민족 차별 또는 민족 말살의 정책도 이러한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도 일본이 외국인 등록 규정 같은 전근대적이고 반인권적인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3. '재일 조선인'의 이주사

'재일 조선인' 사회의 형성 문제를 이야기할 때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그 역사적 기원과 관련된 부분이다. 일반적으로 재일 조선인 사회가 일제의 강제 연행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현재 '재일 조선인' 가운데 압도적 다수는 1930년대 중반 이전에 일본에 정착한 사람들의 후손이다. 숫자로는 중일전쟁(1937년) 이후 일제에 의해 강제 동원되어 일본에 이주한 사람들이 많았지만 이들 가운데 대다수는 해방

이후 다시 귀국했기 때문에 강제 동원을 '재일 조선인' 사회의 형성과 직결시키기는 힘들다. 따라서 여기서는 중일전쟁 이전의 이주에 초점을 맞추어 '재일 조선인' 사회의 형성 문제를 살펴보겠다.

조선인의 일본 이주는 1910년 한일합방과 그에 따른 식민 정책의 결과로 이루어졌다. 한일합방 이후 토지조사사업 등 일제의 수탈 정책으로 많은 농민이 유민화된 가운데, 일제가 일본의 급속한 자본주의 발전에 따라 나타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22년부터 조선인의 자유 도항을 허용한 것을 계기로 연평균 1만 명 이하이던 일본으로의 유출 인구가 연평균 3만 명 이상으로 급증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1924년 2월 자유 도항이 철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되었다.

당시 일본에서는 조선인에 대한 동화보다 멸시가 크게 작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일본 당국의 선전과는 달리 일본에서 조선인은 일본인과 동일한 권리를 갖는 주체로 인정받지 못했다. 조선인은 일본의 신민이 아니라 '외지인'일 뿐이었고 조선인들은 국내에 거주할 때보다 더 심한 민족 차별을 실감하게 되었다.

일본에 건너간 조선인들은 거의 글을 모르는 무학자들이었다. 한글도 모르는데 일본어를 알 리가 없었다. 게다가 마을 공동체를 벗어난 적이 없는데 일본의 풍습을 알 리가 없었다. 그 결과는 일본인에 의한 멸시, 억압, 차별이었다. '조센징'이라는 표현 자체가 부락민, 아이누, 오키나와인과 함께 일본 안에서의 차별을 상징하는 용어였다. 일본인이 흔히 내뱉는 "정어리가 생선인가, 찬밥도 밥인가, 조센징이 인간인가?"라는 말이나 일부 셋집 앞에 붙어 있던 "개나 조센징 사절"이라는 글, 방적 공장에서 일하는 조선인 노동자를 "방적의 조선 돼지"라고 부른 것 등은 이 무렵 일본에 거주하는 조선인이 일상 생활에서 겪고 있던 차별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조선인 노동자는 같은 직종의 일본인 노동자에 비해 더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면서도 더 적은 임금을 받았다. 심지어 정주화의 과정에서도 집을 구하지 못해 일본인들이 살기를 꺼리는 불량 주택, 가건물, 축사, 전염병 환자 수용 시설 등의 열악한 공간에 모여 살았다. 다행히 집을 구하더라도 거기에는 일본인보다 많은 보증인과 보증금이 필요했고 집주인의 횡포와 그로 인한 차가(借家) 쟁의가 잇달았다.

민족 차별과 함께 조선인 노동자는 계급 차별의 대상이 되었다. 저임금, 장시간 노동, 열악한 노동 조건이 조선인 노동자의 현실이었다.²⁾ 일제 당국이 인정했듯이 "조선인 노동자의 생활 상태는 실로 비참 그 자체"였다. 여기에 1920년대 말부터는 세계 대공황의 여파로 일본 경제가 위기에 빠지자 조선인 노동자들은 일상적인 실업의 위협에 직면해야 했다.

이러한 차별에 대한 조선인의 대응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났다. 그 하나는 민족 운동과 노동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조선인끼리의 사회적 연결

2) 당시 방적 공장의 조선인 여성 노동자들이 불렀다는 다음의 노랫말은 이러한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자아 우리 여공들아 하루 생활 물어보세 밤이에도 한밤중에 깊은 잠에 빠져들 때 시끄러운 기상소리 감긴 눈을 깨웠으니 머리 빗어 올리고서 얼굴을 씻어내고 부리나케 허둥지둥 식당으로 나가보면 먹지도 못할 밤에 된장국만 탕그러니 밥을 국에 말아먹고 공장에 나갔지만 허리 펴고 살아갈 날 언제나 올 것이냐 뽕뽕 뉘인 이곳에도 전등불을 밝혀 두고 태산같은 기계뭉치 가슴에 안노라면 시간은 훌러훌러 숙소로 돌아갈 때 친 구없는 텅빈 방에 홀로 젖는 슬픔이여"

망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향에서 사람들을 계속 불러들임으로써 조선인 사회의 힘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조선인들은 특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모여 살고 있었다. 조선인들은 '조선정(朝鮮町)', '조선촌(朝鮮村)'이라고 불리는 특정한 지역에 집주(集住)함으로써 각종 차별에 맞서 자신을 지키는 생활 공간을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일본 사회 그 자체가 적대적 차별 구조를 가지고 있는 가운데 조선정과 조선촌은 조선인에게 자위와 생활, 안식의 장소였다.³⁾

이러한 집주화는 정주화와 아울러 진행되었다. 당초 조선인의 도항은 생산 연령층에 의한 일시적인 단신 출가의 성격이 강했다. 초기 도항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처음에는 고향에서 생활을 꾸릴 정도의 돈을 모으면 귀국한다고 생각했다'고 회고하는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단신 출가자는 정주화를 지향하기 시작했다. 고향에서 처자를 불러들이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여성 인구의 비율이 급증했다. 보기를 들어오사카의 경우 1916년 조선인 남성 100에 대한 조선인 여성의 비율은 겨우 2에 불과했지만 1921년에는 20, 1926년에는 31, 1931년에는 47로 계속 증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주화의 과정 속에서도 고향과의 연계는 결코 끊이지 않았다.

조선인의 도일은 기본적으로 일제 식민지 지배의 산물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고향을 떠나 일본으로 간 조선인은 식민지 지배의 최대의 피해자였음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동시에 도일은 하나의 생존 전략으로서의 적극적인 선택이기도 했다. 많은 도일 조선인들이 차별에 맞서 싸우면서 일본에서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 데 성공했다. 열악한 삶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고향과의 유대를 유지하고 나아가 고향에 남아 있는 사람들의 삶의 조건이 향상되는 데도 이바지했다. 이러한 역사적 과정을 통해 현재의 '재일 조선인' 사회가 존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중일전쟁이 시작되면서 일제는 대륙 침략 전쟁에 필요한 군수 산업 노동력 확보를 위해 강제 징용을 시작했다. 그 결과 1939년부터 1945년까지 약 72만 명의 노동자와 36만 명의 군속, 군인이 징발되었다.

해방이 될 무렵 200만 명에 이르던 재일 조선인들은 해방 이후 개인 희망이나 연합군 사령부 및 일본 정부의 귀환 계획에 따라 1950년 11월까지 약 140만 명이 귀국했으나 한국의 불안한 정치 경제 사정과 오랜 기간 일본 체류로 인한 국내 연고 상실 등의 이유로 1950년 12월 당시 56만여 명이 귀국하지 못하고 현지에 잔류했다.

1959년 이후 약 10만 명의 '재일 조선인'이 복송되었고, 그 이후 급격히 늘어나는 귀화나 일본인과의 결혼 등으로 해서 일본 국적 취득자는 늘어나는 반면, 한국 국적의 '재일 조선인' 수는 줄어들고 있다. 일본은 소수 민족에 대한 차별이 심하고 강력한 동화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재일 조선인'들은 많은 정신적 고통 및 물질적, 제도적, 사회적 차별을 받아왔다. 따라서 직업 선택과 직장 생활에 어려움이 컸고, 그로 인해 초기에는 단순 노동, 후기에는 서

3) "일본인 세계에서 떨어진 조선촌에는 몇 안되는 즐거움 가운데 하나인 막걸리가 있고, 무당의 신명나는 푸닥거리가 있는 곳, 명절에는 마을 광장에 고국에서 온 공연을 온 연예인들의 공연을 볼 수 있는 곳. 소박하면서도 갑자기 싸움이 일어나거나 거칠게 달려들기도 하고, 울부짖는 여자 소리, 떠들썩한 웃음 소리, 무너지는 소리, 고향지르는 남자들 소리가 울려 퍼지는 별세계였다."

비스 위주의 산업에서 생업을 유지하고 있다. 더욱이 남북의 이념 대결로 해서 전체 '재일 조선인' 사회의 분열된 단체 활동은 이들에게 또 다른 분단을 겪게 하며, 일상 생활과 교육에서도 현격한 차이를 가져왔다.

4. 1945년 이후 일본의 외국인 정책과 '재일 조선인'

1945년 직전 일본에 거주하던 조선인에게 불충분한 형태이기는 하지만 참정권이 인정된 적도 있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전쟁이 끝난 후(1945년 12월) 중의원 선거법을 개정하면서 부칙에 '호적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당분간 정지시키기로 하면서 재일 조선인을 비롯한 외국인에 대한 배제 정책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1947년 5월에는 '외국인 등록령'을 공포해 일본에 거주하던 조선인을 외국인으로 규정했다. 여기에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발효되면서 '재일 조선인'들은 선택의 여지도 없이 일방적으로 국적을 박탈당하고 외국인이 되었다. 조선인을 비롯해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 지배로 인해 일본에 거주하던 많은 '외지인'이 일본 민족의 구성 요소에서 배제된 것이다. 이로써 일본 사회 안에서는 다시 한 번 '단일 민족 신화'의 강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이후 1980년대까지 일본 정부는 '재일 조선인'의 권리를 극도로 제한하는 일련의 정책을 취했다. 1955년에는 외국인등록법에 의해 악명 높은 지문압날(押捺)제도를 도입했고 '당연의 법리'⁴⁾라는 논리에 의해 '재일 조선인'의 공무 취임권(지방 공무원과 교원 포함)을 부정했다. 일본 정부는 이와 같이 권리의 행사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차별 정책을 취하면서도 교육, 납세 등의 의무와 관련해서는 일본인과 똑같이 취급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 예를 들어 '재일 조선인' 사회에서 고조되고 있던 민족 교육의 열기를 억압하기 위해 문부성은 조선인의 자녀도 일본 국민으로서 일본 학교에 취학할 의무가 있다는 논리를 내세워 민족 학교를 학교로 인정하지 않았다.

과거 자신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일제의 식민지 지배에 의해 일방적으로 제국국민이 되었던 '재일 조선인'들은 전후에도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일본으로부터 외국인으로 배척되었다. 1945년 8월 15일의 해방은 한민족에게 국적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지만 일본에 남은 '재일 조선인'들에게는 새로운 차별의 시작이었다. 일본 정부는 국적 조항에 의해 일본 국민이 아닌 '재일 조선인'의 생활 보장이나 직업 선택권 등의 제반 권리를 제한하는 한편 차별에서 벗어나려면 일본에 귀화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귀화할 때에도 일본식의 성명을 사용할 것을 강요하는 등 일본으로의 동화를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러한 차별에 맞서 '재일 조선인'들은 양심적인 일본인들과 연대해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투쟁을 끈질기게 벌였다. 그 결과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아동수당법 등 일련의 사회 복지 법안에서 국적 관련 조항이 철폐되고 국공립 대학 및 초·중등학교에서의 국적 제한

4) 공권력의 행사나 국가 의지의 형성에 참가할 수 있는 공무원에게는 일본 국적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가리킨다.

조항도 철폐되는가 하면 지방 자치 단체에 고용되는 '재일 조선인'이 늘어나는 등 '재일 조선인'의 권익이 많이 신장된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1991년에는 구식민지 출신자와 그 자손에 대해서는 특별 영주 자격이 인정되고 1993년에는 '재일 조선인'에 대한 차별의 한 상징이던 지문압날제도도 폐지되었다. 이로써 '재일 조선인'에 대한 제도적 차별의 장치는 하나둘씩 깨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재일 조선인'이 일본 사회에서 주체적이고도 평등한 소수 민족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시하라의 '삼국인' 발언이 다수의 일본인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제도적 차별과는 다른 차원의 차별이 아직 강하게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현재 '재일 조선인'의 문제를 이해할 때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외국인 참정권을 둘러싼 논란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재일 조선인' 사회 내부에서도 찬반의 양론이 있지만 초점을 일본 정치 체제에 국한시킨다면 '재일 조선인' 문제에 대한 일본의 이중성을 잘 알 수 있다.

얼마 전부터 몇몇 지방 자치 단체에서 '국민'이 아닌 '주민'의 권리라는 차원에서 '재일 조선인'에게 지방 자치에 국한해 참정권을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공명당을 비롯한 일부 정당에서도 '재일 조선인'의 참정권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바 있다. 그 결과 그 동안 여러 차례 '재일 조선인'에게 지방 자치 선거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국회에 상정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자민당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고 말았다. 보기를 들어 2000년 7월에 영주 외국인에 대해 지방 자치 선거권을 인정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이 법안에 반대하는 자민당 의원들에 의해 대안으로서 '재일 조선인' 등의 특별 영주권자에 대해 정부에 신고하는 것만으로 일본 국적을 부여하는 법안이 의원 입법의 형식으로 준비되기도 했다. 정부의 재량이 아니라 본인의 의사에 의해 일본 국적을 취득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 자체는 국적 선택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일견 긍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이면에 외국인의 권리 신장을 억제하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 문제이다. 지방 자치 단체에서의 외국인 선거권법에 대항해 제창된 일본 국적 취득안은 외국인 선거권법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것이고 외국인의 국적 선택권을 보장하는 듯한 모양을 갖추고 있지만 그 속셈은 재일 조선인 등 외국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데 있다. 이는 일본이 제국주의 국가 시절부터 취해 온 동화 정책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는 것이다.

5. 마치며

이 지구상에 단일 민족의 신화가 자랑스럽게 이야기되는 나라는 일본 외에는 한국이 유일하다. 단일 민족 신화를 강변하는 것은 결코 일본만의 특수한 현상이 아니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일종의 합병증이 있다. 곧 현재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일본 사회인 것이다. 보기를 들어 우리는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가 대두할 때마다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자행된 다른 민족에 대한 차별과 억압, 나아가 학살을 왜곡했다고 비

판한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에 일본의 식민지였던 조선에서도 우리 민족에 의해 화교에 대한 압박과 차별이 이루어졌다는 역사적 사실을 아는 한국인은 과연 얼마나 될까? 대통령을 비롯해 초등학교 학생에 이르기까지 모두 "Be the Reds"라는 문구가 새겨진 붉은 상의를 입고 '모든 국민이 하나가 되었다'고 외칠 때 거기에는 다른 민족을 배제하는 의식이 숨어 있는 것이 아닐까? 다른 민족에 의해 식민지 지배를 받은 피해자로서의 쓰라린 역사를 갖고 있지만 거기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 채 어느새 가해자의 입장에 서게 된 우리는 우리보다 처지가 못한 다른 민족 또는 우리보다 낙후된 나라에 사는 재외 동포에게 민족 차별을 전가하는 경향이 있다. '민족 차별'이라는 일본 제국주의의 유산이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받은 바 있던 '피해자'로서의 우리 민족에게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재외 동포에 대한 관심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5) 1931년 7월 초순 단 3일 사이에 조선에 거주하고 있던 화교 가운데 100명 이상이 조선인에 의해 죽음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